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연구책임자 | 배 정 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연구책임자 | 배 정 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동북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6,5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 배정호 책임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 (연구총서 ; 05-19)

ISBN 89-8479-343-4 93340 : ₩6,500

349.13-KDC4
327.52-DDC21

CIP2005002795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탈냉전시대 전환기 일본의 국내정치 변화와 특징	5
1. 21세기 국가개혁의 지향과 보수대연합	7
2. 고이즈미 내각의 등장과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추구	29
III. 탈냉전시대 전환기 일본의 국가전략과 대외전략	61
1. 신보수세력의 국가전략과 대외전략 노선	63
2. 안보전략	71
3. 대북전략과 북·일관계	103
IV. 결론	125
참고문헌	12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34

표 목 차

<표 II-1>	모리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	31
<표 II-2>	자민·공명·보수 3당 연립정권에 대한 평가	32
<표 II-3>	각 정당별 지지율	32
<표 II-4>	고이즈미 후보의 득표	35
<표 II-5>	2001년 7·29 참의원 선거의 정책 쟁점 및 공방 ..	38
<표 II-6>	2001년 7·29 참의원 선거의 결과(정당별 당선자수)	39
<표 II-7>	자민당 파벌 상황(2001년도)	41
<표 II-8>	개혁대상(기득권 세력)과 자민당(2001년도)	42
<표 II-9>	2003년 11·9 총선의 자민당과 민주당의 선거 공약	46
<표 II-10>	2003년 11·9 총선의 정당별 의석 획득수	46
<표 II-11>	2003년 11·9 총선에 따른 파벌의 의석수 변화 ..	48
<표 II-12>	2003년 9·20 자민당 총재선거의 결과	49
<표 II-13>	2003년에 발족한 제2기 고이즈미 내각의 명단	50
<표 II-14>	2004년 7·11 참의원 선거의 결과	52
<표 II-15>	2004년 자민당 3역의 인사	54
<표 II-16>	2004년 제2차 고이즈미 연립 개조내각	55
<표 II-17>	2005년 9·11 중의원 총선의 결과	58
<표 II-18>	2005년 자민당 3역의 인사	59
<표 II-19>	2005년 제3차 고이즈미 연립내각	60
<표 III-1>	정치대국화 전략의 구도와 특징	65
<표 III-2>	일본의 UN 예산 분담율(%)	67
<표 III-3>	해외 주둔미군의 현황(2004년도 기준)	76
<표 III-4>	미일의 공통전략목표	84
<표 III-5>	주일미군 재편안의 주요내용	87
<표 III-6>	2004 방위계획의 대강의 비교 특징	95
<표 III-7>	북일 정상회담의 의제별 합의사항 및 과제	115
<표 III-8>	제2차 평양회담의 핵심 합의 사항	121

I

서론

탈냉전기 전환기의 일본 정치는 거의 모든 정당의 여당화에 따른 정치공간의 변화 및 정치주도세력의 세대교체라는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즉,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자민당 장기정권이 확대된 정책-정치공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제도적 피로 및 정치개혁 능력의 한계성의 노출과 더불어 붕괴함에 따라, 일본 정치는 일련의 정치변동 속에서 연립정권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따라서 공산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은 국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가지면서 현실노선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정치공간의 양적·질적 변화 속에서 신보수세력이라는 전후세대가 일본정계를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신보수세력은 국민들의 기대에 응해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걸고,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개혁 등을 위해 ‘강력한 리더십의 정치’를 추구하였으며, 그와 같은 21세기를 지향한 일본의 개혁정치는 선거돌풍을 통해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화 성향속에서 개혁정치를 기치로 자민당내 파벌 타파 등 전후 일본정치의 주요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한층 국정운영기반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신보수세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공헌 및 역할 증대를 통하여 21세기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대외정책노선을 표명하였고, 그와 같은 대외정책노선은 정치공간의 보수화 속에서 미·일동맹의 강화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등장과 더불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전환기의 일본 국내정치와 대외전략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탈

냉전시대 일련의 정치변동에서 고이즈미 정권까지 즉, 2005년 9·11 총선의 자민당 압승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정치에 관해서는 정치과정론적 접근(political process approach)을 하고, 대외전략에 관해서는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을 한다.

II

탈냉전시대 전환기 일본의 국내정치 변화와 특징

1. 21세기 국가개혁과 보수대연합

가. 전환기의 정치변동과 정치공간의 보수화

전후 38년간 집권해온 자민당이 제도적 피로와 정치개혁 능력의 한계성을 노출하면서 일본정치는 지각 변동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와 같은 일본정치의 일련의 지각변동은 직접적으로는 정계의 부패, 정치개혁을 둘러싼 자민당 내부의 갈등 및 여야간의 대립, 자민당 정권의 정치개혁 실패 등에 의한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일본사회의 변화, ‘정책-정치’ 공간의 확대와 자민당 정권의 한계성, 동서냉전체제의 붕괴 등에 의한 것이었다.

일본의 정치변동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치러진 1993년의 7·18 총선 직후 제 1당 자민당은 연립정권의 수립 실패와 더불어 38년 만에 붕괴하고, ‘자민 대 비(非)자민’이라는 대립구도아래에서 신보수계·중도계·진보계 정당간의 세력규합에 의해 비(非)자민·비(非)공산의 8당과 연립정권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정치는 ‘비(非)자민 연립정권 대 야당 자민당’이라는 대립구도 아래에서 일련의 이합집산에 따른 정계개편의 진통을 겪었다.

그러므로 전후 일본정치사에서 1995년이 55년 체제의 형성으로 분기점이 되는 해이라면, 1993년 역시 7·18 총선으로 한 획을 긋는 정치적 의의가 큰 해인데, 7·18 총선의 정치적 의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7·18 총선 그 자체가 일본의 정치변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민당이 연립정권의 구성에 실패할 경우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내포하

는 것이었다. 즉, 7·18 총선의 결과는 자민당의 과반수 의석 획득 실패, 사회당의 대참패, 3개의 새로운 보수정당의 약진에 전반적인 특징이 있다.

둘째, 과거 일본정치의 경우, 즉 사회당에서 이탈한 민사당이나 자민당에서 탈당한 신(新)자유클럽의 경우 그 직후의 총선에서 대참패를 하였다. 그러나 7·18 총선에서는 자민당이 현상유지를 하는 가운데 자민당을 이탈한 신생당(新生黨)이나 신당(新黨)사키가케가 약진을 하였고, 아울러 자민당을 외부에서 비판하면서 ‘개혁정치’를 주장하였던 일본신당(日本新黨)은 급부상하였다. 그리고 중도정당인 민사당이나 공명당은 현상유지를 하였지만 사회당은 64석이나 잃는 대참패를 하였다. 즉, 새로운 정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혁신계인 사회당은 대참패를 하였고, 신보수계의 정당들은 두드러진 약진을 한 것이다. 이는 전후의 정치체제 즉, 자민-사회의 양당체제 및 보혁 대결의 구도를 근간으로 출발해서 60년대 이후 보수·중도·혁신의 다당체제 아래에서 발전해 왔던 55년 체제가 한축인 혁신계의 몰락으로 붕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수·혁신의 대결구도의 붕괴에 따라 사회당의 변모 또한 일본정치의 변화에 주요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자민당을 비판하면서 정치개혁을 주창했던 새로운 보수정당들이 약진한 것은 자민당에 커다란 자극이 됨과 동시에 질적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였다. 즉, 자민당으로 하여금 ‘정치개혁과 세대교체’를 축으로 하는 당내 변화를 겪게 되었다.

넷째, 7·18 총선을 통하여 젊은 정치인들이 정계에 많이 들어 오게 되었고 게다가 호소카와 모리히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

郎), 하타 쓰토무(羽田),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등 쇼와(昭和)세대가 일본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 정계에 세대교체가 이루지고 있음과 더불어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이 일본정계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은 ① 전후 민주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그 이전의 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거사 및 대미 콤플렉스를 덜 가지는 특징을 나타내었고, 그러므로 ② 과거의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에 대하여 반성과 사죄를 표명함으로써 전후 총결산을 단행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강화론을 주창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대국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정치적 의미를 지닌 7·18 총선을 계기로 하여 일본 정치는 일련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각 정당 및 정파는 일련의 합종연횡에 따른 정계개편을 겪으면서, ① ‘비자민 연립정권’ 대 ‘야당 자민당’ ② ‘무라야마 사회당총리의 연립정권’ 대 ‘통합야당 신진당(新進黨)’ ③ ‘오자와 신진당 당수’ 대 ‘하시모토 자민당 총리의 연립정권’ 등과 같은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연립정권의 시대가 개막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치변동에 따른 연립정권의 시대 즉 ① 호소가와 연립정권(1993.8-94.4) ② 하타 연립정권(1994.4-94.6) ③ 무라야마 연립정권(1994.6-96.1) ④ 하시모토 연립정권(1996.1-96.11)을 거치면서, 일본정치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첫째,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모두 연립정권에 참여하여 여당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본정당의 여당화는

일본의 정치공간을 거의 보수화로 변모시켰다. 특히, 무라야마 연립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당은 현실노선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로써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기본이념이나 정책노선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즉, 1996년 1월에 치러진 자민당, 신진당, 사회민주당의 당대회에서 제시된 정계개편 및 주요정책에 대한 기본방침에는 명확한 정책의 대립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둘째, 55년 체제에서 제1야당이었던 사회당이 연립정권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침하함에 따라 일본의 정치구도는 ‘보수 대 혁신’의 구도에서 ‘보수 대 보수’의 구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변화와 더불어 사회당은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변경하였다.

셋째, 정계개편 등 일련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호소카와 모리히로, 오자와 이치로, 하타 쓰토무, 고노 요헤이, 하사모토 류타로,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菅直人) 등의 쇼와(昭和)세대가 국정을 담당하며 일본정치의 핵심 주역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정계에 세대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울러 신보수세력이 일본정계의 중심세력으로 실질적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탈냉전기 전환기의 일본정치는 거의 모든 정당의 여당화에 따른 정치공간의 변화 및 정치주도세력의 세대교체라는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즉,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자민당 장기정권이 확대된 정책-정치공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제도적 피로 및 정치개혁 능력의 한계성의 노출과 더불어 붕괴함에 따라, 일련의 정치변동기에 등장한 호소가와 연립정권, 하타 연립정권, 무라야마 연립정권 등 비자민 연립정권들은 거의 모든 정당의 여당

화 및 진보정당의 현실노선 추구에 따른 탈진보화를 초래하면서 정치공간을 거의 보수화로 변모시켰으며, 아울러 이들 비자민 연립정권들의 리더십의 부족과 국정운영 능력의 한계 노정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및 근본적인 경기불황의 타파를 위한 경제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정치’가 요망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공간의 양적·질적 변화 속에서 신보수 세력이라는 전후세대가 국정을 리더하며 일본정계를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나. 신보수세력의 국가개혁 지향과 보수대연합

동서냉전시대의 55년체제가 ‘통상국가 일본’을 ‘경제대국 일본’으로 발전시켰다면, 탈냉전시대의 7·18총선을 계기로 형성되는 새로운 체제는 ‘경제대국 일본’을 ‘정치대국 일본’으로 발전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7·18 총선 이후 일본정치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신보수세력은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하여 국가개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즉, 정계개편과 보수대연합, 주도세력으로서의 신보수세력의 부상과 개혁정책 추구 등도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한 국가개혁의 추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다.

(1) 하시모토 자민당 단독내각의 등장과 국가개혁의 주창

(가) 하시모토 자민당 단독정권의 등장

일본정치의 변화, 특히 일본 정치공간의 보수·우경화와 신보

수세력의 등장은 1996년 10월 20일의 중의원(衆議院)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0·20 총선은 과거의 중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6명 선출)가 아닌 소선거구·비례대표제 병립제(한 선거구에서 1명 선출, 비례대표는 11개 블록별로 정당득표에 따라 당선) 아래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였는데, 그 결과는 자민당 승리(21→239), 신진당 패배(160→156), 민주당 현상유지(52→52), 공산당 약진(15→26), 사민당 몰락(30→15) 등이었다.

10·20 총선의 결과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계인 공산당이 다소 약진하였지만, 군소정당에 불과하므로, 일본사회의 ‘충보수화’ 분위기 속에서 신보수세력이 중의원 의석의 절대 다수를 점한 것이다.

그리고 10·20총선결과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보수정당인 자민당이 비록 과반수 획득은 못하였지만, 1996년 11월 7일 사민당과 신당 사키가케의 각외(閣外) 협력¹으로 하시모토 총리의 집권 2기 1차 내각(2차 개각)을 구성함으로써 3년 3개월 만에 자민당 정권을 부활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민당 단독집권의 부활을 실현시킨 하시모토 총리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²를 바탕으로 ‘21세기 일본을 위한 국가개혁’를 추구하게 되었는데, 개혁을 지향한 하시모토의 강력한 리더십은 자민당의 지지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정치는 자민당의 세력확대와 더불어 자민당 장기집권시 권력운용의 핵심요체였던 파벌과 ‘족(族)그룹’(특정 정

¹ 閣外協力は 내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² 1996년 11월 하시모토 내각출범시 국민들의 지지도는 매우 높은 56.6%였다.

책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그룹)이 다시 부활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나) 하시모토 정권의 국가개혁

하시모토 총리는 내각출범과 함께 21세기에 대비하는 ‘개혁과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고비용-저효율’의 국가경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즉, 하시모토 총리는 1997년 1월 20일의 시정방침 연설을 통하여 행정개혁을 비롯하여 재정구조개혁, 경제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혁, 사회보장구조개혁, 교육개혁 등 6대 국가개혁을 발표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명백히 하였다.

6대 국가개혁 가운데에서 행정개혁은 1996년 10·20 총선시 자민당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정당에 의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즉 관료기구의 비대화·경직화를 타파하고, 국가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의 간소화·투명성의 제고를 추구하는 행정개혁이 주창되었다.

그러나 행정개혁은 현실적으로 중앙부처(省廳)·족(族) 그룹·관련 이익단체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 가장 어려운 개혁으로 지적되었다³.

그러므로 하시모토 총리는 내각출범 이후 곧 ‘정부조직 개편’과 ‘지방분권 실현’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아울러 6대 국가개혁의 발표 이전에 이미 총리직속기구로서 「행정개혁회의」(1996. 11, 본부장: 하시모토 총리)를 설치함과 더불어, 행정개혁

³ 그 이전의 총리들도 행정개혁에 착수하였지만, 대체로 실패로 끝났다.

작업에 착수하였다⁴.

행정개혁의 지향 내용은 경직된 관료제를 타파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개편 즉, 중앙부처의 관료가 가지고 있는 권력·권한을 정치·지방·시장의 세 가지 분야에 분권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분권화 작업의 사전작업으로서 정치·지방·시장에 대한 신뢰성 회복은 분권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정치로의 분권’을 위해서는 총리권한 및 보좌기능 강화,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화 등을 지향하는 행정기구의 개혁, 국회개혁, 정당개혁을 추구하여야 했고, ‘지방으로의 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른 ‘지방→지방’으로 권한 이양 등을 추구하여야 했으며, ‘시장으로의 분권’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및 철폐, 민영화 등을 추구하여야 했다.

이와 같은 행정개혁을 지향하고자 하였던 하시모토 내각의 「행정개혁회의」는 1997년 9월에 「행정개혁 중간보고」, 동년 12월에 「행정개혁 최종보고」를 발표하였다. 「행정개혁 최종보고」는 ① 22개 중앙부처(1府 12省 9廳)의 13개 중앙부처(1府 12省廳)로의 축소 ② 내각기능 및 총리권한의 강화 ③ 정부기능의 구분과 더불어 중앙정부는 정책기획업무만 담당, 기타 집행업무는 外廳(agency)으로 이관 ④ 정책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하시모토 내각의 행정개혁에 대한 의욕적인 추진은 내각의 지지도가 상당히 상승되도록 하였다.⁵

⁴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무라야마 연립내각때 설치되었다(1995. 7. 3).

⁵ 하시모토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駐페루 일본대사관 인질 사건’(1996. 12)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1997년 9월에 행정개혁 중간보고안이 발표되는 등 개혁작업이 구체화되면서 56.1%라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었다.

(다) 하시모토 정권의 집권강화와 자민당 파벌정치의 부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20 총선 이후 하시모토 2차 내각은 사민·신당사키가케와의 각외협력을 바탕으로 자민당 단독내각으로 출범하였으나, 원내 과반수 미달로 인하여 정국 운영에 한계성을 노정하였다.

따라서 하시모토 정권은 군소정당의 일부 의원, 야당 신진당의 탈당파 및 무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입작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자민당 재집권 10개월 만에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즉 1997년 9월 5일부터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중의원 정당별 의석분포는 자민당 251, 신진당 131, 민주당 52, 공산당 26, 사민당 15, 태양당 10, 신당 사키가케 2, 무소속 13 등이었다.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확보는 하시모토 총리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원내 정치기반을 제공하였고, 하시모토 정권의 집권기반이 한층 강화되도록 하였다.

하시모토 총리는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확보와 더불어 집권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1997년 9월 11일 집권 제2기 2차 개각(3차 개각)을 단행하였다. 제2기 2차 내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개혁작업을 담당해 온 실세들이 대거 기용되었다. 즉, 행정개혁을 위하여 사토 고코(佐藤孝行) 자민당 행정개혁 추진 본부장이 총무청 장관, 사회보장 개혁을 위하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가 후생성(厚生省) 대신, 경제구조 개혁을 위하여 호리우치 미츠오(堀内光雄)가 통산성 大臣, 교육개혁을 위하여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가 文部省 大臣에 기용되었고, 재정구조 및 금융체제 개혁을 위하여 미즈즈카 히로시(三塚博)가 대장성(大藏省) 대신에 유임되었다.

둘째, 자민당의 내부는 사민-신당사키가케와의 정책협력을 중시하는 ‘연립정권파’와 신진당 등 야당내 보수세력과의 결집을 추구하는 ‘보수연합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동안 하시모토 총리 및 내각은 ‘연립정권파’와 ‘보수 연합파’의 세력균형 위에 존립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는 ‘보수연합파’의 대표적 인물인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 관방장관이 교체되는 대신, YKK그룹 즉, 야마자키-가토-고이즈미를 중심으로 하는 ‘연립정권파’는 계속 중용되었다.

셋째, 전체적으로 보면, 당 3역 즉, 가토 고이치(加藤纘一) 간사장,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정무조사회장,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무회장의 유입과 더불어 당내 파벌안배에 치중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파벌배분은 오부치파(派) 8명(총리 포함), 미츠즈카파(派) 4명, 미야자와파(派) 4명, 와타나베파(派) 4명, 무파벌 1명이다.

요컨대 하시모토 총리의 제2기 2차 개각(3차 개각)은 국정운영면에서는 21세기를 위한 개혁지향적 특징을 나타내지만, 권력운영면에서는 해체되었던 파벌이 다시 부활되는 조짐을 가시화시키는 것이었다.

자민당의 각 파벌들 즉, ‘오부치’파, ‘미츠즈카’파, ‘미야자와’파, ‘와타나베’파, ‘고모토’파 등 5대 파벌은 1993년 7·18총선을 계기로 자민당이 야당으로 전락한 뒤, 1994년 11월 당개혁 차원에서 내려진 해체 결정에 응하여 일단 해체되었다.

그러나 파벌은 실질적으로는 ‘헤세이연구회(平成研究會)’(오부치파), ‘신정책연구회(新政策研究會)’(미츠즈카파), ‘목요연구회(木曜研究會)’(미야자와파), ‘정책과학연구소(政策科學研究所)’(와

타나베파), ‘번정정책연구소(番町政策研究所)’(고모토파) 등 정책 연구회 형태로 전환하여 존재하였다.

따라서 파벌은 운영면에서도 기존 파벌 영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아울러 세력확대를 위한 활동도 ‘수면 아래’에서 여전히 전개되었다.⁶

이와 같은 파벌의 존재는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파벌에 대한 정치헌금 금지 등으로 이전에 비해서 약화되었지만, 1996년 10·20 총선을 계기로 자민당 단독정권이 성립되면서 재차 ‘수면 위’로 가시화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즉, 각 파벌은 해체 결정이후에 중단하였던 수련회 개최 등을 통하여 결속력 강화, 세력 확대를 추구하였는데, 파벌의 영향력은 1996년 11월 제2기 1차 내각(2차 내각)의 구성에 가시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9월 제2기 2차 내각(3차 내각)의 구성에는 위에서 언급한바 같이 ‘파벌안배’라고 지적될 정도로 강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자민당 단독정권의 재등장은 특정정책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군(群)인 족(族)의 부활을 초래하였다. 족(族)의원은 정책전문가로서 관료의 한계성을 보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정(政)-재(財)-관(官)’의 3각 구조아래에서 각종 이권개입과 더불어 정치비리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활동 때문에, 1993년 7·18총선 이후 호소카와 비자민(非自民) 연립정권의 출범과 함께 정치개혁이 추진되는 와중에 극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1996년 1월 무라야마 연립정권에 자민당이 참여하

⁶ ‘와타나베’派는 파벌 회장인 와타나베 미치오가 1995년 9월 사망함에 따라, 나카소네 야스히로 前 총리의 중재로 무토 前 외상이 1995년 10월 신임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면서 족(族)은 서서히 소생하기 시작하였고, 동년 11월 하시모토 자민당 단독정권이 탄생하게 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상당히 회복하게 되었다. 족(族)은 중의원의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종전과 다소 다른 측면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⁷, 하시모토 내각의 행정개혁에 적지 않은 저항으로 영향력을 미쳤다.⁸

요컨대 1996년 10·20 총선을 계기로 자민당 단독집권이 부활되고, 자민당의 세력확대가 전개되면서 자민당 장기집권시 권력 운용의 핵심요체였던 파벌과 족(族)이 재차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라) 야권의 변동과 하시모토 총리의 퇴진

1996년 10·20 총선에서 패배한 제1야당 신진당은 자민당 단독정권의 출범에 따른 위기감 속에서 오자와 이치로 당수의 독선적인 당운영에 대한 불만의 누적, 계파간 불협화음의 증폭 등으로 인하여 분열 조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97년 6월의 도쿄도(東京都) 의회선거에서 신진당 후보자 전원(11명)이 낙선하게 되자, 당내에는 오자와 당수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한층 동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분열상태에 있던 신진당은 오자와 당수가 재선되는 과정에서 표출된 계파간 갈등으로 인하

⁷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전환되면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문에 종전보다 지역의 민원에 대해 한층 강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는 정치인들을 이전보다 小粒化되도록 하였고, 大局的 시각보다 눈앞의 개별 이익에 집착하도록 하였다. 族의원의 경우도 지역구의 다양한 요구 때문에 때때로 자기 분야 이외에서 활동을 하여야 했고, 대국적 차원보다 개별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활동하여야 했다.

⁸ 郵政族의 반발이 가장 심하였고, 建設族과 農林族도 강하게 반발하였다.

여 마침내 창당 3년 만에 해체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즉, 1997년 12월 18일 당수로 재선된 오자와는 당내 계파간 갈등과 균열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게 되고 아울러 당 해체와 더불어 ‘일본 재건 구상’을 골격으로 하는 신 보수정당의 결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신진당은 1997년 12월 27일 당 해체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이듬해 1월에는 자유당, 신당우당(新黨友黨), 신당평화(新黨平和), 개혁클럽, 여명(黎明)클럽, 국민의 소리 등 6개의 정파로 분열하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정당구도는 술한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다당적 구도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리고 붕괴된 신진당을 대신하여 간 나오토(菅直人)가 이끄는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야권의 구심세력이 된 민주당은 야당 입장의 독자노선을 견지하기 위해 대여 공세의 강화 등 선명성 부각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권정당을 지향하여 반보수세력 중심의 야권통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98년 4월 27일 새로운 중도정당인 ‘민주당’(중의원 93명, 참의원 38명)을 결성하게 되었다. 즉, 구(舊)‘민주당’, 민정당(民政黨), 신당우당(新黨友黨), 민주개혁연합(民主改革聯合)이 통합하여 제1야당 신(新)‘민주당’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야권의 이합집산과 더불어 통합작업은 1998년 7월의 참의원(參議院) 선거를 겨냥하면서 추진되었다.

한편,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확보와 더불어 집권기반이 강화된 상태에서 등장한 하시모토 집권 제2기 2차 내각은 1997년 9월에 국민들의 행·재정개혁 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민지지율이 50%를 상회하는 높은 지지속에서 출범하였으나, ‘록히드사건’에

연루되었던 ‘사토고코’(佐藤孝行)의 총무청 장관의 입각·사퇴 파문을 계기로 하락세로 반전되기 시작하였다. 즉, 하시모토 내각의 지지율은 9월 개각 파동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관료 및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따른 각종 개혁정책의 미흡에 대한 불만, 경기침체의 심화,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 하시모토 총리의 중국 정보기관 여성과의 밀회설 등으로 급락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 경에 이르러 30%대로 하락하였고, 참의원 선거전후인 1998년 7월에는 20%대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하시모토 총리의 정국 주도력은 약화되게 되었고, 1998년 7월의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패배로 끝났다.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인하여 참의원의 구도는 중의원과 달리 여소야대(여 104, 야 148)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하시모토 총리는 참의원 선거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다.

(2) 국가개혁 추구를 위한 국정 운영 주도력 강화와 보수대연합

(가) 오부치 내각의 등장과 보수대연합의 추진

하시모토 총리의 퇴진으로 그 후임을 둘러싸고 자민당내에서는 ‘오부치 게이쥔 대 가지야마 세이로쿠’의 대결을 중심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고노 요헤이 등이 경합을 벌이다가 오부치가 자민당 총재 겸 총리후보로 선출되었다.

따라서 1998년 7월 30일의 중·참의원의 총리 선거에서는 자민당의 오부치 게이쥔 총재와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가 경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의원에서는 오부치 게이쥔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여 총리로 선출되었고, 참의원에서는 간 나오토가 2차 결

선투표에서 총리로 선출되었다.⁹ 즉, 중·참의원에서 서로 다른 총리가 선출된 것이다.

이에 중·참의원은 곧 양원 협의회를 소집하여 총리 지명을 위한 의견 조정을 하게 되는데, 협의회 합의 도출이 실패하게 됨에 따라 중의원 우월원칙에 따라 오부치 게이쥬(小淵惠三)가 총리로 지명되게 되었다. 이로써 ‘경제회생’ 및 ‘21세기 국가체제 정비’를 기치로 내건 오부치 정권이 1998년 7월 30일 출범하게 되었다.

오부치 정권은 하시모토 내각의 유산인 국정개혁작업의 마무리, 불황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유사법제의 정비 등 많은 주요한 국정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되었지만, 국민들로부터는 그다지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즉, 오부치 총리의 리더십 결여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신뢰감 저하, 불황의 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등으로 인하여 오부치 내각은 역대 정권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인 25~33%대의 저조한 지지율 속에 출범하였다.¹⁰ 그리고 그와 같은 국민들의 오부치 내

⁹ 제143차 임시국회 개회(1999. 7. 30~10. 7)와 함께 실시된 총리 선거 결과, 衆議院에서는 오부치 게이쥬 自民黨 총재가 제1차 투표에서 총투표수(497표)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268표를 획득하여 164표를 획득한 간 나오토 民主黨 대표를 누르고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參議院에서는 제1차 투표에서 오부치 게이쥬가 103표, 간 나오토가 98표를 획득함으로써 과반수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총투표수 248표) 2차 결선투표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상위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투표에서는 공산당을 포함한 全 야당이 공동으로 지지한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가 142를 획득하여 103표를 획득한 오부치 게이쥬 自民黨 총재를 누르고 총리로 선출되었다.

¹⁰ 1998년 8월 2일자 讀賣新聞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오부치 내각의 지지율은 33.15%였는데, 역대 내각 발족 직후의 지지율로서는 우노 내각의 22.8%, 후쿠다 내각의 27.3%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이다. 또 동년 8월 3일자 朝日新聞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오부치 내각의 지지율은 32%인데 이 역시 우노 내각 및 후쿠다 내각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그리고 동년 8월 4일자 毎日新聞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오부치 내각의 지지율은 22% 지지율의 우노 내각에 이어 두번째로 저조한 25%이다.

각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좀처럼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권 3개월이 경과한 동년 11월 경에는 ‘정권 위기설’의 유포와 함께 지지율은 더욱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오부치 총리는 낮은 국민 지지도, 참의원 여소야대에 따른 집권기반의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국정운영의 주도력을 장악하지 못하고, 야당의 대여 공세에 밀리기만 하였다. 게다가 오부치 정권은 ‘단명 약체 정권’, ‘11월 위기설’의 유포와 더불어 가중되는 정치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집권 자민당은 국정운영의 주도력을 회복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부심하다가, 구(舊)‘공명당’계 세력이 중도노선 표방과 더불어 통합되어 1998년 11월 7일 원내 제3세력인 ‘공명당’으로 등장하게 되자,¹¹ 정책성향이 유사한 공명당 및 자유당과의 정책연대 즉, ‘자민·자유·공명당 3당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명당이 자민당의 ‘자민·자유·공명당 3당 연대’ 제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표명함에 따라¹² 오부치 정권은 오자

¹¹ 公明黨은 1993년 8월에 호소가와 비자민 연립정권에 참여한 후, 新生·民社黨 등과 함께 1994년 12월에 통합야당인 新進黨에 합당함으로써 해체되었다. 그러나 舊公明黨계는 당 해체 이후에도 지방조직을 ‘公明’으로 존속시키는 등 명맥을 유지하여 왔는데, 新進黨이 계파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6개의 정파로 분열하게 되자 衆議院은 新黨平和로, 參議院은 黎明클럽(公明으로 통합됨)으로 각각 독립되어 분당하였다. 그런데 創價學會와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세력 단일화 요구가 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 6월 29일 ‘新黨準備委員會’가 결성되고, ‘新黨準備委員會’는 동년 10월 12일 ‘新黨平和’가 ‘公明’에 합류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公明黨을 재결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新黨平和’와 ‘公明’이 동년 11월 7일 ‘公明黨’ 합당대회를 개최하고 집행부 및 기본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公明黨은 당 해체 3년 10개월 만에 국회의원 65명(衆議員 42, 參議員 23)규모의 원내 제 3세력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¹² 公明黨은 자민당의 ‘自·自·公 連帶’ 제안에 대하여 3당 연대에는 참여하지 않고 일단 자민당과 사안별로 협력하는 ‘부분연합’노선의 추구를 표명하였다.

와 이치로가 이끄는 자유당과 연립정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자민당과 자유당간의 정책합의 즉, 각료수 삭감(20명->18명), 유엔 평화활동 적극 참여 등의 정책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민·자유당 연립정권’이 1999년 1월 14일 출범하게 되었다. 즉, 전체 각료수가 20명에서 18명으로 감소되고, 자유당의 노다 다케시(野田毅) 간사장이 자치상(自治相)으로 입각하는 자민·자유당 연립내각이 발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민·자유당 연립정권’의 실현을 계기로 오부치 정권은 ① 자유당과의 연립정권에 따른 원내기반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② ‘자민·자유당 연립정권’을 주장해 왔던 가지야마 전(前)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비주류파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③ 공명당과도 사안별로 정책연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다 안정된 집권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오부치 총리는 자민·자유당 연립정권 및 공명당과의 정책연대를 통하여 주요 현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면서 국정 주도권을 장악해 갔다. 즉, 1999년 3월 17일에는 ‘9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였고, 5월 24일에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을 성립시켰으며, 7월 8일에는 「정부조직 개편법」 및 「지방분권 정비법」을 성립시켰다.

이와 같은 오부치 총리의 정국 주도권 장악과 그에 따른 국정 운영은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계속 상승되도록 하였다. 오부치 보수 연립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자민·자유당 연립정권의 출범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어 계속 올라가다가 1999년 5월부터 40%를 상회하게 되었다.¹³

그러나 자민·자유당 연립정권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여 116, 야 136)의 참의원 구도는 타파되지 않았으므로, 오부치 총리는 정권기반의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위적 정계 개편 즉, 공명당의 여권 편입을 재차 강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오부치 총리는 1999년 6월 28일에 공명당과의 연립정권 수립 의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정책협약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동년 7월 7일에는 연립정권의 파트너인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로부터 공명당의 연립정권 참여에 대한 양해를 구한 뒤 공명당에게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 참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오부치 총리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 수립 제의에 대해 공명당의 간자키(神崎武法)대표 등 집행부도 ‘대안없는 야당’의 이미지를 벗고 ‘정책 실현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판단아래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표명하였다. 즉, 1999년 7월 19일의 공명당 중앙간부회의에서는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합의형 정치가 필요한 만큼 정권에 참여하여 연립정권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운동방침안을 채택하였고,¹⁴ 나아가 7월 24일의 공명당 임시 당대회에서는 연립정권의 참여 방침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로써 자민·자유·공명 3당은 연립정권 수립을 위해 3당의 입장 차이를 본격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고, 1999

¹³ 1999년 7월 10-11일 毎日新聞은 오부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국민지지율은 43%였다. 『毎日新聞』1999年 7月 13日.

¹⁴ 朝日新聞, 1999年 7月 20日. 毎日新聞 1999年 7月 20日.

년 9월 21일 오부치 게이쥬의 자민당 총재 재선과 더불어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은 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자민·자유·공명 3당간의 정책합의가 1999년 10월 4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날 10월 5일에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

자민·자유·공명 3당의 연립정권은 전후 일본정치사에서 최초로 중의원 70%(348/500석), 참의원 50%(141/252석)이상을 장악한 거대 정권인데, 이로써 오부치 정권은 참의원에서의 여소야대의 구도를 극복하게 되었다.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의 새로운 내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내각의 18명 각료에는 자민당 15명, 자유·공명당 각 1명, 민간인 1명이 인선되었는데, 파벌¹⁵간 각료 안배를 통하여 거당 협력체제의 구축을 도모하면서도 3당 연정에 반대한 ‘가토 고이치’나 ‘야마자키 다쿠’가 추천한 인사는 완전히 배제되었다.¹⁶ 또, 자유당 몫으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가 운수성 대신 및 홋카이도(北海島) 장관으로 기용되었

¹⁵ 自民黨내 파벌 현황(1999년 10월 시점)

파 별	세력(명)	파 별	세력(명)
오부치派	93	가토派	71
에토·가메이派	63	모리派	63
야마자키派	31	구고모토派	17
고노그룹	16	無파벌	17

¹⁶ 가토派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大藏相, 니와 유야(丹羽雄哉)厚生相, 가와라 츠토무(瓦力)방위청 장관은 파벌영수인 가토 고이치의 추천과는 무관하며 경륜, 전문성 등이 높지 않아 평가되어 기용되었다. 또 야마자키派의 후카야 통산相도 당총재선거에서 오부치를 지지하며 야마자키 다쿠의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고, 공명당 몫으로 츠즈키 쿠니히로(續訓弘)가 총무청 장관에 기용되었다.

둘째, 미야자와 대장성(大藏省) 대신, 사카이야 경제기획청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을 유입시킴으로써 ‘경제회생 내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오부치파로서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의 측근이자 연정 파트너인 자유·공명당과 유대관계가 깊은 아오키 미키오(青木幹雄)를 관방장관으로 기용하였다. 즉, 오부치 총리는 ‘黨-모리(森)’ ‘내각-아오키(青木)’ 중심체제를 구축한 것이다.¹⁷

넷째, 고노 요헤이 전 자민당 총재가 외무성 대신으로 기용되었는데, 이는 오부치 총리가 경제는 미야자와 대장성(大藏省) 대신, 외교는 고노 외무대신에게 일임함으로써 친정체제 및 국정 주도권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오부치 정권의 ‘21세기 대비 국가체제 정비’

‘평범한 인물’ 오부치 총리의 리더십 부재, 참의원에서의 여소야대에 따른 오부치 정권의 취약한 집권기반 등 어려움 속에서도 오부치 총리와 내각은 ‘21세기 대비 국가체제 정비’를 위하여 1998년 6월 23일 ‘정부조직 개혁 추진본부(본부장 : 오부치 총리)’를 설치하고 하시모토 내각에서 착수하였던 행정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오부치 총리는 국가개혁을 위한 보수 대연합이라는 명분아래 제1차 연정(자민·자유당 연립정권), 제2차 연정(자

¹⁷ 오부치 총리는 개각에 앞서 10월 1일 단행된 黨인사에서 9월의 총재선거서 자신을 지지해 준 모리派의 領袖 모리 요시로를 간사장에 유입시켰다.

민·자유·공민당 연립정권)을 성사시키면서 강화되는 집권기반을 바탕으로 국가체제 정비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예컨대 오부치 총리는 안보개혁과 관련해서 1999년 5월 24일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의 법안 즉,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 역무 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을 성립시켰고, 행정개혁 차원에서 동년 7월 8일 「정부조직개편법」 및 「지방분권 정비법」을 성립시켰으며, 동년 7월 9일에는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국기·국가로 공식화하는 「국기·국가법」을 성립시켰다. 또 동년 7월 29일에는 ‘헌법조사회’¹⁸를 설치하자는 ‘개헌추진연맹’¹⁹의 「국회법개정안」이 가결되도록 하여 2000년 1월부터는 중·참 양원에서 개헌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오부치 정권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의 정책심의 및 입법능력을 제고시키는 개혁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일본 국회는 국회개혁의 노력의 일환으로 1999년 7월 26일 ‘총리·야당 당수간 국회토론 정례화’, ‘정부위원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심의 활성화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2000년 1월 정기국회부터 중·참의원 합동심의회 즉, ‘국가 기본정책 심의회’를 국회에 신설하게 됨에 따라 ① 총리와 야당 당수는 매주 1회 정례적으로 국정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② 종래 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듣고 난 뒤, 일방적으로 일괄 답변함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 공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을 시정할 수

¹⁸ 衆・參議院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헌법조사회’는 의안 제출권이 없는 5년 기간의 한시적 기구이다.(衆議院 의원 50명, 參議院 의원 45명)

¹⁹ 1997년 5월 共產黨, 社民黨을 제외한 초당파 의원(衆・參議員 366명)으로 결성된 ‘改憲推進議聯’은 개헌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이다.

있게 되었다. 그리고 관료가 각료를 대신하여 국회에서 답변하는 제도인 ‘정부위원제도’가 1999년 정기국회(1.19-8.13)를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1999년 가을 임시 국회부터 각료와 정무차관이 직접답변에 나서게 되었다.²⁰ 이는 직접적으로는 책임과 전문성을 겸비한 국회답변을 위한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관료 주도의 정책-정치’를 ‘정치가 주도의 정책-정치’로 전환함과 더불어 정치가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2001년 1월부터 「정부조직 개편법」이 시행되면서, 정무차관은 부대신(副大臣)과 정무관(政務官)으로 대체되었고, 부대신과 정무관이 국회 답변을 하게 되었다.²¹

또한 오부치 총리는 21세기에 대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9년 5월에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21세기 일본의 구상」간담회²²를 발족시키기도 하였다. 동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세기의 국가상 모색’을 위해서는 발본적 개혁이 불가결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주요논점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²³

²⁰ 단, 전문·기술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료가 정부 참고인으로서 답변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함.

²¹ 副大臣은 각료와 사무차관의 중간지위로서 3·4선 경력의 의원중에서 임명되며, 省廳의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다. 그리고 政務官은 초·재선의 소장의원들 가운데 충원되며, 각료가 지시한 특정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²² 「21세기 일본의 구상」간담회는 다섯 개의, 분과회 즉, ‘제1분과회 『세계에 통용되는 일본』’, ‘제2분과회 『윤택함과 활력』’, ‘제3분과회 『안심되고 정감 있는 생활』’, ‘제4분과회 『아름다운 국토와 안전한 사회』’, ‘제5분과회 『일본인의 미래』’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²³ 오부치 총리도 이 합숙토론에 참가하였다.

2. 고이즈미 내각의 등장과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 추구

가. 정치변동과 고이즈미 내각의 등장

(1) 자민·자유 양당의 갈등에 따른 정치변동과 모리 내각의 등장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국정 주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대연합을 지향한 정계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1999년 1월 14일에 자민·자유당 연립정권이 출범하게 되었고, 동년 10월 5일에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이 등장하게 되었으나, 2000년에 들어오면서 자민당과 자유당 간에는 갈등이 노정되기 시작하였다.

자민·자유 양당은 합당은 고사하고 선거협력 문제를 계기로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²⁴ 자민·자유 양당의 갈등은 2000년 4월 1일의 자민·자유·공명 3당의 당수회담에서 한층 증폭되었고, 따라서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자유당과의 결별 선언과 더불어 자유당이 연립정권에서 4월 2일 이탈함에 따라 자민·자유·공명 3당 연립정권 체제는 16개월 만에 붕괴하게 되었다.

한편, 자유당내 ‘反오자와’ 세력들은 신당 결성을 통해 연립정권에 잔류한다는 방침아래 동년 4월 3일에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당명을 보수당으로 결정함과 더불어 자민·공명당 연립정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²⁵

²⁴ 2000년 3월 24일의 선거협력 협상에서 自由黨이 衆議院 26개 小選舉區의 협력을 요청한데 대해 自民黨이 10개 선거구만의 협력을 주장하였고, 이어 25일에는 양당 합당문제에 대해 총선이후에 검토하자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오자와 이치로 自由黨 당수는 3월 27일에 聯政 합의사항의 진척 부진 등을 내세워 聯政脫退 방침을 표명하였고, 3월 29일의 黨 議員 總會에서 ‘保守新黨’ 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야당으로의 복귀를 표명하였다.

²⁵ 自由黨을 이탈한 衆·參議員 26명이 保守黨 창당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이와 같은 정치변동의 와중에서 오부치 총리가 2000년 4월 2일 뇌경색으로 긴급 입원을 하게 되고, 병세가 극히 위중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정부·자민당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내각 출범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즉, 오부치 내각은 동년 4월 4일 총사퇴를 하였고, 이어 4월 5일 오전의 자민당 의원 총회는 모리 요시로 간사장을 신임 총재로 추대하였으며,²⁶ 동일(同日) 오후의 중·참 양원 총회에서는 모리 신임 자민당 총재를 제 85대 총리로 선출하였다.²⁷

따라서 2000년 4월 5일 모리 신임 총리는 공명당의 간자기(神崎) 대표, 보수당의 오기(扇) 당수 등과 회담하여 자민·공명·보수 3당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하고, 오부치 前내각의 각료 전원을 유임시킴으로써 3당 연립정권의 신내각을 출범시켰다.²⁸

2000년 4월 5일에 출범한 모리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은 요미우리 신문(讀賣新聞), 교토통신(共同通信),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등 언론기관의 조사에서 <표 II-1>과 같이 나타났다.

즉, 국민 지지율은 41~49%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는데,²⁹ 이는 무라야마 내각(35%) 및 오부치 내각(32%)의 출범 초기의 지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기도 하다.³⁰ 모리 내각에 기

자유당은 衆·參議員 24명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²⁶ 自民黨 파벌세력을 살펴 보면, 오부치派 衆·參議員 94명, 가토派 70명, 모리派 64명, 가메이派 63명, 야마자키派 31명 順이다.

²⁷ 모리는 衆議院에서 총 488표중 355표, 參議院에서는 총 244표중 137표를 획득하였음.

²⁸ 自由黨 출신인 니카이(二階) 運輸相은 保守黨에 참여함으로써 각료로 유임되었다.

²⁹ 모리 내각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자민당 총재이기 때문에’(38%, 요미우리 신문), ‘오부치 내각을 계승했기 때문에’(36% 共同通信) 등이었고,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정치이념 부재’(46%, 요미우리 신문), ‘지도력 미흡’(18%, 共同通信) 등이었다.

대하는 정책(복수응답)은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① ‘경기회복과 고용정책’(77%) ②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확충’(49%), ③ ‘교육개혁’(16.2%), ④ 재정구조개혁(12.9%), ⑤ 경찰개혁(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 모리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

여론 조사 기관	국민 지지율	조사 기간
요미우리 신문	49%	2000. 4.7~4.8
共同 통신	43%	2000. 4.7~4.8
아사히 신문	41%	2000. 4.11

그러나 모리 내각의 출범과 동시에 발족한 自民·公明·保守 3黨 聯政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45~54%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을 상회하였다(<표 II-2>참조)

自由黨이 이탈하기 이전의 自民·自由·公明 3黨 聯政에 대해서도 일본 국민들은 약 5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바 있는데, 자민·자유·공명 3당 연정이나 自民·公明·保守 3黨 聯政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가 저조한 것은 ‘創價學會’라는 종교단체에 기반을 둔 公明黨의 여당 참가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³⁰ 오부치 총리의 퇴진 직전 오부치 내각의 지지율은 39%수준이었다.

<표 II-2> 자민·공명·보수 3당 연립정권에 대한 평가

구 분	긍정적	부정적	무응답
요미우리 신문	31%	51%	17%
교토(共同)통신	26%	45%	29%
아사히 신문	25%	54%	21%

* 조사기간은 <표II-1>과 동일함.

각 정당별 지지도는 <표 II-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민당의 지지율이 35~39%를 기록하였고,³¹ 다른 정당들은 여전히 바둑권에 머무르는 수준을 나타내었다. 즉, 민주당 4.3~9.8%, 공명당 2.5~3.6%, 자유당 2~3.4%, 공산당 2.5~5% 수준이었다.³²

<표 II-3> 각 정당별 지지율

구 분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자유당	공산당
요미우리 신문	38.6%	4.3%	2.5%	2.7%	2.5%
교토(共同)통신	39%	9.8%	3.6%	3.4%	5.1%
아사히 신문	35%	8%	3%	2%	4%

* 조사기간은 <표II-1>과 동일함.

(2) 모리 요시로 총리의 퇴진과 선거 열풍속의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등장

모리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실언에 따른 자질론 시비를 야기하였고, 이는 정권의 구심력 약화 및 지지율 침하로 귀결되었다. 즉, ‘천황중심의 신의 나라(神國)’, ‘피랍(被拉) 일본인의 제3국 발견’ 등 잦은 실언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 함께 모리 총리의 자질론

³¹ 이와 같은 지지율은 3월 중순경의 조사에 비해 약 10%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³² 오부치 총리의 퇴진 직전, 2000년 3월 18일에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自民黨 28.8%, 民主 6.7%, 公明 3%, 自由 2.2%, 共産 2.9% 수준이었다.

시비를 초래하였고, 자민당 의원의 수뢰 사건 및 외무성 간부의 공금횡령 사건 등은 정권의 구심력을 약화시켰다.

나아가 미국의 핵잠수함과 일본의 실습선 충돌사건시의 불성실한 대응태도에 대한 국민비판,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모리 연립내각은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7%대로 급락함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한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2001년 3월 5일 야당인 민주·자유·공산당 등 4당은 ‘모리내각 불신임’ 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야당의 ‘모리내각 불신임’안은 여당인 자민·공명·보수당 등 3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지만(반대 274, 찬성 192), 야당의 ‘모리내각 불신임’ 안과는 별개로 여권내에서도 총리퇴진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동년 3월 13일의 자민당 전당대회를 전후하여 모리 요시로 총리의 퇴진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모리 총리는 3·13 제67차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사임의사를 나타낸 뒤, 4월 6일에 의해 총리 사임을 표명하였고, 이에 자민당은 ‘4·24 신임 당총재 선출’이라는 선거고시를 하였다.

따라서 각 파벌 및 총재 후보들은 후임총리를 둘러싼 권력계임을 전개하게 되었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중·참의원 소속 국회의원(1인 1표) 및 당원들(1만명 당 1표)에 의해 이루어지나, 총재가 임기(2년) 만료전에 사퇴했을 경우에는 중·참 양원의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과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대표들에 의해 치러졌다.

2001년 4월 24일의 총재선거는 임기만료전의 선거이므로 선거인단이 국회의원과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대표들에 의해 구성되는 선거였는데, 자민당은 폭넓은 출마기회 부여 및 당원들의

의사 반영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천 의원의 수의 감축(30명→20명)과 더불어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표를 확대(1표→3표)하였다. 그리고 대다수의 지부는 밀실정치의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 예비선거를 실시하고, 예비선거에서 1위 득표를 한 후보에게 지부 할당표인 3표 모두를 지지해 주는 선거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4월 19~23일에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의 예비선거를 거친 뒤, 24일 자민당 본부에서 소속 국회의원(346명) 및 각 지부 대표(141명) 등 총 487명의 선거인단이 참석하는 선거를 통하여 총재가 선출되는 것이었다.

4월 12일 실시된 총재후보 등록에는 총리직에 재도전하는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 ‘파벌 파괴’를 선언한 개혁성향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후생상, 가메이 시즈카 정무조사회장, 아소 다로 경제재정상 등 4명이 입후보하였는데, 이 중 최대파벌의 회장으로 제3파벌인 ‘호리우치’ 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하사모토 전 총리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밀실·담합 정치에 대한 비판 및 개혁 요구, 연립내각에 대한 지지도의 저하와 그에 따른 7월 29일 참의원 선거에 대한 당원들의 불안 등의 영향으로 예상을 뒤엎고, 개혁성향의 정치인으로서 하시모토 전 총리보다 상대적으로 국민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보가 지부의 예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압승을 거둬와 함께 123표의 지방표를 확보한 뒤, 소속 중·참의원 선거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당내 권력기반에도 불구하고 하시모토 후보보다 35표를 더 획득하여 제20대 총재로 당선되었다.(〈표 II-4〉참조)

그리고 고이즈미 신임 자민당 총재는 자민-공명-보수 3당의

지원아래 4월 26일 중·참의원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제87대 총리에 선출된 뒤, 개혁추진을 위하여 ‘탈과벌’형 내각을 조각하였다.

<표 II-4> 고이즈미 후보의 득표

후 보	지방표 (47개 都道府縣, 각3표, 총 141표)	중앙표 (중·참의원 346표)	합 계 (487표중 무효 3표)
고이즈미 준이치로	123표 (41개 지역에서 1위)	175표	298표
하시모토 류타로	15표 (5개 지역에서 1위)	140표	155표
가메이 시즈카	3표 (1개 지역에서 1위)	지방 예비선거후 기권	
아소 다로	0표	31표	31표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자민당 총재 당선배경 및 고이즈미 내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93년 7·18 총선이후, 자민당 장기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등장한 非자민 연립정권의 국정운영능력에 불안을 느낀 일본 국민들은 21세기의 일본의 장래를 위해 자민당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자민당 역시 제도적 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민당의 개혁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민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반영되었고,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개혁·자민당 개혁’을 기치로 내건 고이즈미 후보가 당내 권력기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것이다. 일본의 유력지 아시히신문(朝日新聞)은 고이즈미 후보가 지방 예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데 대해 ‘고이즈미 혁명’이라고 특징지었다.³³

³³ 朝日新聞, 2001년 4월 23일

둘째, ‘파벌 파괴’선언과 더불어 모리파를 탈퇴한 고이즈미 후보는 비주류로서 소수세력인 ‘야마자키’·‘가토’ 파 등의 지원을 받으며, 자민당 제1파벌 및 제2파벌의 지원을 받는 하시모토 후보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즉, 고이즈미 후보는 당내 ‘파벌 역학 구도의 재편’ 및 ‘파벌을 바탕으로 한 권력게임의 타파’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총재로 당선된 것이다. 따라서 당내 일부에서는 7월의 참의원 선거를 위해 하시모토 파벌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당·정 인사에서 ‘탈파벌의 인사’를 추구하였다. 예컨대 고이즈미 총리는 당 운영에 있어서 거대 파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파벌 역학 구도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소수파벌 출신의 야마자키 다쿠와 아소 다로오를 각각 간사장 및 정무조사사회장에 임명하였고, 제2파벌 회장인 호리우치 미츠오를 총무회장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내각 구성은 개혁추진을 위해 파벌·당선횟수보다 능력 등을 중시한 ‘탈파벌형 인사’를 단행하였다. 즉, 당내 제1의 파벌인 하시모토 파벌은 비주류로 전락함과 동시에 당·정 인사에서도 결과적으로 배제되었다.

셋째,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는 모리 총리의 잔여임기이므로, 5~9월까지 5개월이고, 고이즈미 연립내각의 정치적 생명은 7월의 참의원의 결과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한부적인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연립내각은 내각발족 직후,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역대 내각 중 최고의 지지율을 나타내었다.³⁴

³⁴ 고이즈미 내각의 취임 3주째를 맞이하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내각은 일본의 방송·신문 조사 모두 80% 이상의 지지도를 나타내었고, 한 일본

나.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기반 강화와 개혁정치 추구

(1) 7·29 참의원 선거와 고이즈미 총리의 지지기반 강화

5개월 잔여임기의 고이즈미 연립내각은 2001년 6월의 도쿄도(東京都) 의원 선출선거 및 7월의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통하여 2년 정식 임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즉, 2001년의 7·29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생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일본의 참의원은 중선거구·비례대표제에 따라 임기 6년의 의원을 3년마다 정원(252명)의 1/2씩 개선하는데, 7·29 참의원 선거는 2004년까지 정원 10명 감축 방침(2001년 247명 → 2004년 242명)에 따라 121명(지역구 73명, 비례구 48명)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개혁을 기치로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국민들의 높은 개인적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경제·행정·사회 전분야에서 ‘성역없는 구조개혁’을 외치면서 참의원 선거를 지휘하였다.

따라서 2001년 7·29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이즈미 연립내각의 개혁정책이 최대의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여야 및 보수·진보 세력들은 구조개혁, 야스쿠니 신사 참배, 평화헌법 개정 등의 보수·우경화 정책들을 둘러싼 대결을 전개하였다. 즉, 7·29 참의원 선거는 <표 II-5>와 같은 정책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 및 보수·진보 세력들간의 첨예한 공방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치러졌다.

방송 조사에서는 91%까지 나타났다. 중앙일보, 2001년 5월 17일.

<표 II -5> 2001년 7·29 참의원 선거의 정책 쟁점 및 공방

<p>구조개혁·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권 자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64兆 円의 부실채권 처리, 국책 발행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한 '개혁 플랜'을 마련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더라도 2000년대 '약동의 10년'을 구현해 갈 것을 표명. ○ 제1야당 민주당 등 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의 '先구조개혁 後경기부양' 정책은 경기침체는 물론 기업 도산 및 실업 증가를 초래하여 국민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불안정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p>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민·보수·자유당 등 보수 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국민으로서 호국영령을 참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본적으로 찬성인장을 표명. ○ 민주·공명당 중도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의 국민감정을 배려하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의 분리 이장 및 국립묘지 조성 방안 등을 제시. ○ 공산·사민당 등 진보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의 참배는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정교분리 원칙(헌법 20조)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대.
<p>평화헌법 개정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민·보수·자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환경변화에 적합한 헌법 개정 주창. ○ 민주·공명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국민적 논의의 필요성 제기 등 적극적 태도 노정. ○ 공산·사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 자위권 인정 등을 포함한 개헌 반대, 현행 헌법수호 입장 재확인.
<p>외교 및 안보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민·보수·자유·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 동맹 강화, UN 평화유지군(PKF) 참여, 유사법제 정비 등 주창. ○ 사민·공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법제 정비 반대, 비동맹·평화 중립국 실현 주장.

<표 II-6> 2001년 7·29 참의원 선거의 결과(정당별 당선자수)

정당명	지역구	비례대표	계	비고
자민당	44	20	64	+3
공명당	5	8	13	-
보수당	-	1	1	-2
민주당	18	8	26	+4
자유당	2	4	6	3
사민당	0	3	3	-4
공산당	1	4	5	-3
자유연	0	0	0	-1
무소속	3	-	3	-3
합계	73	48	121	

7·29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표 II-6>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자민당의 대승을 비롯한 연립여당의 승리로 끝났고 보수계의 세력확대로 나타났다. 고이즈미 총리의 높은 인기,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추진 등 우경화 정책노선과 국민들의 보수화 성향의 상승작용 등에 힘입어 자민당 및 연립여당이 승리하였고, 진보세력의 퇴조와 더불어 야당세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7·29 참의원 선거 결과의 특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보면, 연립여당은 78석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참의원 총의석수(247)를 훨씬 웃도는 138석의 확보이다.

둘째, 선거결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면 고이즈미 총리의 개인적 인기에 힘입은 자민당의 대승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자민당은 모리 총리 아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기존 의석수의 초과 달성, 과거 참의원 선거와의 비교시 최고 당선율 기록(89.9%), 총

47개의 선거구중 27개의 1인 선거구에서 25승 2패 그리고 2인 이상의 중선거구에서 거의 최고득표 당선 등의 성과를 올렸다.

셋째, 야당의 경우, 중도 및 보수정당인 민주당과 자유당이 기존의 의석수를 약간 늘리는 약진을 한데 비하여,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공산당은 기존의 의석수가 감소하여 퇴조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1995년과 1998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공산당은 기존 의석수보다 3석이 감소하는 하향세를 보였고, 사민당은 지역구에서의 전패와 더불어 기존 의석수보다 4석이나 감소하는 퇴조를 보였다. 이는 일본정치사회의 공간이 보수·우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무소속의 퇴조인데, 이는 과거에 무소속 또는 야당을 지지하였던 무정파층이 7·29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지지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 2001년의 7·29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대승이라는 성과를 거둔 대가로 고이즈미 총리는 동년 8월 10일 중·참의원의 의원총회에서 투표없이 임기 2년의 총재로 재선되었다. 즉,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인기를 지렛대로 7·29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끔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 개혁정치의 추진과 당내 갈등

자민당 총재에 재선되어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8월 13일 공식·개인 자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고,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를 기반으로 ‘성역 없는 개혁’정치를 추진하였으며, 중의원 보궐선거

(10.28)의 승리 및 자민당 단독 과반수(241/480)의 확보에 따른 위상 강화 등을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 추진 및 정국주도는 자민당내 비주류의 적지 않은 반발을 초래하였다. 자민당내 파벌 상황은 <표 II-7>과 같은데, 4·24 총재선거를 계기로 고이즈미 총리의 전 소속파벌인 모리파를 비롯하여 고이즈미 총리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야마자키파, 가토파가 주류에 편입된 반면, 고이즈미와 경선하였던 하시모토파 및 가메이파, 하시모토 전 총리를 지지하였던 고노파, 고모토파 등이 비주류로 전락되면서 당내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표 II-7> 자민당 파벌 상황(2001년도)

하시모토파	104명	야마자키파	25명
모리파	56명	가토파	15명
가메이파	53명	고모토파	13명
호리우치파	42명		

그러므로 고이즈미 총리가 국민지지를 배경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등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정책결정과정에서 자민당의 간섭을 배제하려 하자,³⁵ 하시모토파 등 비주류는 이에 반발하여 조직적 연대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표 II-8>에 나타난 바와 같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과의 연대도 추구하였다.

즉, 비주류는 반‘고이즈미’모임의 결성을 활발히 시도하였고, 아

³⁵ 2001년 11월 19일 고이즈미 총리는 내각이 마련한 법안을 자민당에서 사전심사를 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울러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반론을 제기하였으며, ‘총리 주도의 정국’을 ‘자민당 주도의 정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내각 개편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내각 개편을 개혁저항 세력과의 타협으로 인식하여 개각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요컨대, 개혁을 둘러싸고 자민당내 주류·비주류간의 주도권 경쟁 및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표 II-8> 개혁대상(기득권 세력)과 자민당(2001년도)

개혁정책	개혁대상(기득권 세력)	개혁대상과 자민당과의 관계
공공사업예산 축소	대형 건설회사 및 공공사업 계획했던 지방자치단체	가메이 시즈카 전 정무조사회장 중심의 중진의원 지원
부실채권 정리	은행빛 많은 건설·유통회사	주류파 중진급 의원들과의 지원 세력
우정사업 민영화	우정성 공무원 및 관련 단체직원	전통적인 하시모토파 지지
공기업 통폐합	공기업 및 관련 단체 직원	여당 지지세력
국채발행 억제	지역구·지역단체에 예산지원을 공약한 국회의원	주로 자민당 의원들이 예산지원 공약을 많이 함

다. 양대 정당 구도의 형성과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입지 강화

(1) ‘양당 대결 구도’ 형성과 정국 주도력 강화

(가) 야당 통합과 새로운 제1야당 민주당의 발족

일본의 야당인 민주당(원내 제2당)과 자유당(원내 제5당)은 고이즈미 연립정권의 출범 이후 소극적인 대정부 비판 등으로 참의원 선거(01.7), 중·참의원(02. 10) 등에서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한계를 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구(舊)사회당·신당 사키가케 출신의원, 자민당 이탈세력이 모인 구(舊)민주당, 자민당계의 민정당, 구(舊)민사당계인 신당친우(新黨親友), 노동조합 단체인 민주개혁연합 등으로 구성되어 중의원 115석 및 참의원 60석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이지만, 국민지지율이 6~9%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자유당 역시 2000년 4월 연립정권 탈퇴 이후, 군소정당으로 전락되는 등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간나오토 민주당 대표와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는 2003년 7월 23일 당수회담을 갖고, 자유당의 해체와 더불어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에 합류하는 흡수합병 형식으로 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10월 5일 ‘신민주당(新民主黨) 합당대회’가 개최되고, 새로운 제1야당 신민주당이 발족하게 되었다.

신민주당은 발족 즉시 민주·자유 양당간 선거구 조정 등 합당 후속조치를 취하면서 2003년의 11·9 총선을 겨냥한 전열 정비를 추구하였다.

(나) 2003년의 11·9 총선거와 양대 정당구도의 형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민당은 고이즈미 총재의 연임과 더불어 거당협력체제의 지향아래 내부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하였고, 민주당은 자유당과의 흡수통합과 더불어 세력 기반의 확대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총선을 위한 2003년 10월 10일에 중의원이 해산되었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헌법 제7조에 의해 국회의원 임기(4년)

만료 이외에 총리 직권에 의한 중의원(정원 480명: 소선거구 300명, 비례대표 180명) 해산으로도 실시가 가능한데, 통상 국회의원 임기만료 2년여를 앞두고 선거분위기의 조성과 더불어 집권당이 유리한 시점에 중의원 해산을 통하여 실시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3년 10·10 중의원 해산과 더불어 11월 9일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게 되었다.

2003년의 11·9 중의원 선거는 자민당과 민주당의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자민당과 민주당은 <표 II-9>와 같은 선거공약을 제시하면서 선거전을 전개하였다.

전반적으로 자민당은 농촌지역과 70대 이상의 노령층 및 여성 유권자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30~40대 및 남성 유권자층·무당파층 등에서 선전을 나타내었다.

11·9 총선거의 투표율은 과거 최저였던 96년의 59.7%에 이어 전후 두 번째 낮은 59.9%를 기록하였고, 선거결과는 자민당 부진, 민주당 약진, 사민당·공산당 등 진보정당의 퇴조였다.³⁶

정당별 획득 의석수는 <표 II-10>과 같은데, 자민당은 총 237석을 차지함으로써 해산 전(247석)보다 10석이 감소하여 단독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였고, 공명당은 해산 전(31석)보다 3석 증가한 34석을 획득하였으며, 보수신당(保守新黨)은 해산 전(9석)보다 5석 감소한 4석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연립정권 전체로써는 해산 전(287석)에 비해 다소 약화된 275석을 획득하였지만, 국회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할 수 있는 절대안정 다수(269) 의석을 확보하였다. 게다가 11월 10일 오후

³⁶ 朝日新聞, 2003년 11월 10일.

보수신당(保守新黨)의 해체와 더불어 자민당에 합류함으로써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24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총 177석을 획득함으로써 해산 전(137석) 보다 40석이 증가한 선전을 하였고, 전후 최대의 야당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반면, 진보정당인 공산당은 20석→9석, 사민당은 18석→6석으로 감소하는 퇴조세를 나타내었다. 즉, 진보정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몰락이 나타났다.

요컨대, 11·9 총선에서 자민당은 단독 과반수의 획득에 실패하였지만, 11·9 총선을 계기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자민 대 민주’의 양당대결 구도가 구축되었다.

그러므로, 2004년에는 7월의 참의원을 의식한 여·야간의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민주당의 대정부 비판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II-9> 2003년 11·9 총선의 자민당과 민주당의 선거 공약

	자민당	민주당
내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지만 강한 정부 - 지방분권 추진 ○ 디플레 극복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 - 2%대의 경제성장, 300만 명 신규고용 창출 ○ 구조개혁 정책기조의 유지·발전 - 도로공단(05)·우정사업(07) 민영화 ○ 경찰관 증원을 통한 치안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관료화, 정치자금 전면공개를 통한 부패정치 청산 ○ 디플레 극복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 - 경제재생 5개년 계획, 재정재건 계획 - 실업률 4%대 억제 ○ 도로공단 폐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 경찰관 증원을 통한 치안 강화
외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국제협조 증시 - 아프간에 대한 부흥지원, - 테러척결을 위한 국제공헌 확대 ○ 미일동맹 및 국제협력 틀속에서 자위대 파견을 포함한 무응지원 원칙 ○ 대화와 압력을 통한 대북정책 추구 - 평양선언의 성실한 이행 촉구 - 6자회담 등 국제협력의 기초아래에서 핵·미사일·납치문제의 포괄적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적 외교 추진 - 대등한 미일동맹관계 구축, -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통한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 이라크지원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이라크 파견 반대, - UN결의에 따른 자위대 파견 ○ 납치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위한 노력강화와 6자회담 등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지 천명 - 피납자 가족의 조기 귀국
안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청의 성(省) 승격 ○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위한 항구법 제정 추진 ○ 탄도미사일 방위시스템의 정비 ○ 자민당 창당 50주년이 되는 2005년 11월까지 헌법 개정안과 함께 개헌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개헌국민투표법' 및 '국회법 개정안' 등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방위구상 책정 - 미사일·테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체제 구축 ○ 국민주권·기본적 인권존중·평화주의의 이념에 기초하고 국민합의를 토대로 논헌(論憲)에서 창헌(創憲)의 단계로 격상

<표 II-10> 2003년 11·9 총선의 정당별 의석 획득수

	당 선	지역구	비례대표	해산시 의석수
자민당	237	168	69	247
민주당	177	105	72	137
공명당	34	9	25	31
공산당	9	0	9	20
사민당	6	1	5	18
보수신당	4	4	-	9
무소속의 회	1	1	-	5
자유연합	1	1	-	1
諸 派	0	0	-	2
무소속	11	11	-	5
계	480	300	180	475(5명 결원)

(다) 자민당 파벌의 재편과 정국주도력 강화

2003년 11·9 총선을 계기로 자민당 파벌의 구도는 재편되는 조짐을 나타내었다. 11·9 이전, 파벌의 세력 구도를 살펴보면, 최대파벌 하시모토파(100명)와 제2파벌 가메이파(59명)·고무라파(16명)·고노그룹(11명) 등 소속의원 2/3가 비주류이었고, 고이즈미 총리의 전 소속 파벌인 모리파(59명)를 비롯하여 야마자키파(27명)·구(舊) 가토파(14명) 등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11·9 총선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전 소속 파벌인 모리파 등 주류파가 의석수를 확대하여 세력을 신장시킨 반면, 당내 최대 파벌인 하시모토파 등 비주류 세력은 의석수가 감소하는 퇴조세를 보였다.

즉, <표 II-11>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주류파의 모리파가 세력을 신장하여 제2파벌로 부상하고, 야마자키파와 구(舊) 가토파가 각각 의석을 확장한 데 비해 비주류측은 하시모토파·가메이파·호리우치파·고무라파 등 모두 의석수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11·9 총선의 결과는 고이즈미 총리의 전 소속 파벌인 모리파가 당내 핵심 포스트인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당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고이즈미 총리의 정국 주도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하였다.³⁷

이와 같은 파벌 구도의 변화는 중의원 소선거구제의 도입 및 고이즈미 총리의 파벌개혁 등으로 파벌 영향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당 총재선거·총선 등 정치일정의 이행과정에서 주류인 모리파가 비주류파의 분열상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³⁷ 11·9 총선직후 자민당에 합류한 舊보수신당 소속 衆·參議院 7명의 의원들은 자민당 내 하나의 파벌인 '니카이 그룹'을 결성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세력 확장에 주력한 점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표 II-11> 2003년 11·9 총선에 따른 파벌의 의석수 변화

	파벌명	총선전 의석수	총선후 의석수	비 고
주류의 주요파벌	모리파	59	71	12석 증가
	아마자키파	27	29	2석 증가
	구(舊) 가토파	14	15	1석 증가
비주류의 주요파벌	하시모토파	100	92	8석 감소
	가메이파	59	51	8석 감소
	호리우치파	51	47	4석 감소
	고무라파	16	15	1석 감소

(2) 고이즈미 자민당 총리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친정체제 추구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부진,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국민 지지율이 2003년 초반 40%대로 하락하였지만, 지방·국회 보궐선거(4.27)에서의 자민당 승리, 유사법제의 중의원(5.15) 및 참의원(6.6)에서의 성립, 미·일정상회담(5.23)에서의 외교적 성과 등에 힘입어 50%대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치적 입지를 다소 회복한 고이즈미 총리는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50%대를 계속 유지해 갔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는 50%대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가메이 시즈카 전 정무조사회장, 후지이 다카오 운수대신, 고무라 마사히코 외무대신 등이 출마한 2003년 9·20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 657표 중 399표(60%)를 획득하여 3선에 성공하였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당원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된

9·20 자민당 총재선거의 결과는 <표 II-12>와 같은데, 고이즈미 총재의 임기만료(9.30)에 따른 총재선거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50%대의 국민지지율을 바탕으로 하는 총선 경쟁력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여 60%라는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계속 총재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표 II-12> 2003년 9·20 자민당 총재선거의 결과

	득표수	득표율
고이즈미 준이치로(현 총재)	399	60.7%
가메이 시즈카(전 정부조사회장)	139	21.2%
후지이 다카오(전 운수장관)	65	9.9%
고무라 마사히코(전 외무장관)	54	8.2%

자민당 총재에 3선된 고이즈미 총리는 2003년 9월 22일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하여 제2기 내각을 발족시켰다. 즉, 제2기 내각의 명단은 <표 II-13>과 같은데, 고이즈미 총리는 주요 각료의 유임에 따른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11월의 총선을 겨냥한 정국 전환 및 주도권 장악을 위해 신진·소장 의원들을 대거 기용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친정체제의 구축을 위해 정부와 당에 후쿠다 관방장관, 아베 간사장을 포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총재선거의 후유증인 당내 불협화음의 조기 봉합을 위해 주요 파벌 및 연립정부 참여 정당(공명당, 보수신당)에 각료직을 골고루 안배하여 거당 협력체제를 추구하였다. 아울러 고이즈미 총리는 ‘강한 일본’의 건설 및 세대교체를 지향하여 전후세대의 보수성향이 강한 신진·소장 정치인들을 당·정에 포진시켰다.

<표 II-13> 2003년에 발족한 제2기 고이즈미 내각의 명단

직 위	이 름	나 이	비 고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61	중의원 의원
총무장관	아소 다로	63	전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
재무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58	전公安위원장, 중의원 의원
외무장관	가와구치 요리코	62	민간출신
법무장관	노자와 다이조	70	참의원 의원
문부과학장관	가와무라 다케오	61	중의원 의원
후생노동장관	사카구치 지카라	69	중의원 의원
농수산장관	가메이 요시유키	57	중의원 의원
경제산업장관	나카가와 쇼이치	50	중의원 의원
국가공안위원장	오노 기요코	67	중의원 의원
국토교통장관	이시하라 노부테루	46	전 행정개혁장관, 중의원 의원
관방장관	후쿠다 야스오	66	중의원 의원
방위청장관	이시바 시게루	46	중의원 의원
경제·재정장관	다케나카 헤이조	52	민간출신
환경장관	고이케 유리코	51	중의원 의원
행정개혁장관 겸 오키나와·북방대책	가네코 가즈요시	61	중의원 의원
과학기술정책담당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48	중의원 의원
방재위기관리장관	이노우에 기이치	71	중의원 의원

라. 보수적 정치공간의 개혁화 지향과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 정국 주도력 강화

고이즈미 총리는 ‘강한 일본’의 건설 및 세대교체를 지향하여 전후세대의 보수성향이 강한 신진, 소장 정치인들을 당·정에 포진시켜 친정체제의 구축을 도모한 뒤, ‘자민 대 민주’의 대결 구도 아래에서 개혁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여야 간의 정국 주도권 경쟁은 2004년의 7·11 참의원 총선을 의식하면서 ‘자민 대 민주’의 대결을 축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고이즈미 정권의 집권 3주년³⁸을 평가하는 2004년의 4·

³⁸ 2004년 4월 26일은 고이즈미 연립내각이 집권 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26 보궐선거에서 연립여당은 이라크내 일본인 인질사건의 발생(04.4.8)에 따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문제, 연금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을 선거쟁점으로 삼아 민주당에 완승을 하였으나, 이어 자민당 지지율의 하락³⁹과 더불어 무당파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금개혁 문제와 자위대의 이라크 다국적군의 참가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하면서 치러진 7·11 참의원 선거에서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004년 7·11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자민당 지지층의 이탈로 인하여 <표 II-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민당 부진, 민주당 약진, 공명당 현상유지, 공산당·사민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오카다(岡田) 간사장을 신임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국민연금 일정기간 동안의 미납문제

³⁹ 아사히(朝日新聞)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5·22 제2차 평양 정상회담직후 54%였던 내각지지율이 6월 19·20일 조사에서는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 결정에 대한 58%의 반대 표명과 더불어 40%로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지지가 지지를 상회하는 상황이 2003년 3월의 이라크 개전 직후에 나타난 이후, 1년 3개월 만에 재차 나타난 것이다. 朝日新聞, 2004년 6월 22일.

<고이즈미 내각 지지율의 역전(2004. 6. 19·20 조사)>

支 持	40%
不支持	42%

<정당별 지지율(2004. 6. 19·20 조사)>

정 당	지지율(%)
자민당	30(37)
민주당	15(14)
공명당	4(2)
공산당	2(2)
사민당	1(1)
지지정당 없음	40(37)

*()안의 수치는 5월 23일 조사 시의 지지율.

및 내각의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전개하여 얻은 것이다.

그러나 자민·공명당 연립정권 차원에서는 공명당의 1석 증가로 안정 다수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즉, 자민·공명당 연립정권은 7·11 참의원선거에서 총 60석을 획득함으로써 비개선 의석(79석)과 합쳐 139석을 확보하였으므로 참의원 내 안정다수(129석) 이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표 II-14> 2004년 7·11 참의원 선거의 결과

정 당	획득 의석수
자민당	49(51)
민주당	50(38)
공명당	11(10)
공산당	4(15)
사민당	2(2)
무소속	5(9)

*()안의 수치는 선거전의 의석수

7·11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부진한 결과,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당내 비주류의 책임추궁의 공세와 더불어 야당의 내각 실정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었으며, 내각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정책 추진 및 당·정 개편에서의 정국 주도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으나, 고이즈미 총리는 국정장악력의 약화를 막기 위해 대외관계를 위한 수뇌외교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2004년 9월 27일 제2차 고이즈미 연립내각의 개조 및 당 3역 인사를 독자적으로 단행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4년 9월 16일 브라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3억 인사 및 내각 개조에 대해 “최대 현안인 우정 민영화에 협력할 인사를 중심으로 개조할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⁴⁰ <표 II-15>와 같이 당 3억으로 맹우인 아마자키 다쿠 전 부총재의 측근인 타케베 츠도무를 간사장에 기용함과 더불어 정책실무통으로서 우정 민영화에 협력적인 교마 후로오와 요사노 카오로를 총무회장과 정무조사회장에 각각 발탁하였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는 <표 II-16>과 같은 제2차 연립내각의 개조를 단행함과 더불어 아마자키 다쿠 전 부총재와 가와구치 요리코 전 외무장관을 각각 ‘특명사항 총리보좌관’과 ‘외교담당 총리보좌관’에 기용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연립내각의 개조 및 당 3억 인사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당내 파벌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선거혁명’을 통해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제1차 내각의 구성에서 ‘파벌 파괴’의 인사를 단행하였고, 이후의 내각 구성에서도 가능한 파벌의 영향을 배제하였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2차 내각의 개조에도 파벌의 추천을 받지 않고, 아울러 파벌 실력자들을 배제하면서 소위 ‘고이즈미류’의 독자적인 인사를 추구하였다.

둘째, 고이즈미 총리가 내각의 명단 발표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우정 민영화 실현 내각’이라고 특징지었듯이 최대 현안인 우정민영화, 중앙과 지방의 조세재정에 관한 삼위일체 개혁 등 구조개혁 노선을 추구하기 위해 정책 실무형의 인사들을 기용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⁴⁰ 日本經濟新聞, 2004년 9월 17일

셋째, 고이즈미 총리가 내각 구성에 파벌 추천을 배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전 파벌인 ‘모리파 편중’으로 나타났다. 즉, 17명의 각료 가운데 외무장관을 비롯한 5명의 각료가 모리파에서 기용되었다. 이는 당내 최대 파벌인 하시모토(橋本) 派 閥을 비롯한 비주류 파벌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표 II-15> 2004년 자민당 3역의 인사

간사장	타케베 츠토무(아마자키派)
총무회장	쿄마 후로오(舊하시모토派)
정무조사회장	요사노 카오루(무파벌)

<표 II-16> 2004년 제2차 고이즈미 연립 개조내각

직 위	이 름	나 이	비 고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62	중의원 의원
총무장관	아소 다로	64	전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
재무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59	전 공안위원장, 중의원 의원
외무장관	다니가키 사다가즈	59	전 자민당 총무국장, 전 문부과학장관
법무장관	노오노 치에코	68	참의원 의원
문부과학장관	나카야마 나리아키	61	중의원 의원
후생노동장관	오즈지 히데히사	63	참의원 의원
농수산장관	시마무라 요시노부	70	중의원 의원, 전 농수산장관
경제산업장관	나카가와 쇼이치	51	중의원 의원
국가공안위원장 · 방재위기관리장관 · 유사법제담당장관	무라다 요시다가	60	중의원 의원, 전 내각부 부장관
국토교통장관	키다가와 카즈오	51	중의원 의원, 전 자민당 재정위원장
관방장관	호소다 히로유키	60	중의원 의원, 전 통산성 정무차관
방위청장관	오노 요시노리	68	중의원 의원, 전 문부과학 부장관
경제재정장관 · 우정 민영화 담당 장관	다케나카 헤이조	53	민간출신
환경장관 · 오키나와 장관 · 북방장관	고이케 유리코	52	중의원 의원
금융장관	이토 다츠야	43	중의원 의원, 전 내각부 부장관
규제개혁장관 · 행정특구담당 장관	무라카미 세이치로	53	참의원 의원
과학기술정책 · IT 담당장관	다나하시 야스후미	41	중의원 의원

이처럼 전열을 재정비한 고이즈미 총리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개혁 추진력 및 정국 주도력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최대현안인 우정민영화, 중앙과 지방의 조세재정에 관한 삼위일체 개혁 등 구조개혁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의한 정국운영은 ‘강한 일본의 건설’을 위해 ‘작은 정부’·‘민간주도 지향’ 등의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국 주도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하였고, 보수성향의 정치공간이 개혁화를 지향토록 하였다.

따라서, 경제개혁차원의 구조개혁, 안보개혁차원의 법·제도적 정비, 정치개혁차원의 파벌정치 타파 및 족의원 중심의 이익정치 쇄신 등이 추진되었으며, 헌법개정 논의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고이즈미 총리는 최대 현안인 우정민영화 법안이 중의원에서 5표 차로 통과된 뒤, 2005년 8월 8일 참의원에서 17표 차로 부결되자, 즉시 정치생명을 걸고 중의원을 해산하였다. 즉, 우정민영화 개혁 반대파 일부 의원들이 자민당 공천의 배제에 따른 반발로 ‘국민신당(國民新黨)’을 창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을 감행하는 등 정국이 혼란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담보로 배수진을 치며 9월 11일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8·8 중의원 해산에 대해 ‘자폭 테러해산’, ‘자멸’ 등으로 표현하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보수성향의 정치공간의 개혁화 지향 속에서 일본의 최대 경제단체인 경단련(經團聯)은 9·11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8월 29일 자민당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경단련(經團聯)의 중의원 총선에서의 자민

당지지 표명은 1993년 이래 12년만의 지지선언인데, 이는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작업에 대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9·11 중의원 총선은 ‘개혁 대 반개혁’의 대결구도 아래 고이즈미 연립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평가의 성향을 지니면서 치러졌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퇴진’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소신 정치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사즉생(死卽生)’으로 선거에 임하였다. 그리고 우정민영화법안 반대파 의원들이 탈당하여 국민신당 소속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소위 30여 개의 ‘반란군’ 지역구에는 ‘고이즈미의 칠드런(children)’이라고 불리는 신인들을 ‘자객’으로 출마시켰다.

9·11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을 비롯한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가 예측될 정도로 자민당의 확실한 우위가 나타났다.⁴¹ 이는 우정민영화 법안에 대한 반대파 의원들의 탈당 및 신당창당의 충격여파가 미미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의 결과는 9·11 중의원 총선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표 II-17>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민당은 과반수인 240석을 훨씬 상회하는 전후 제2위인 296석⁴²을 획득하였고, 민주당은 기존의석보다 64석이나 적은 113석을 획득함으로써 대참패하였다. 게다가 자민·공명의 연립여당은 전체의석(480석)의 2/3인 320석을 상회하는 327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자민·공명의 연립여당이 중의원이 가결시킨 법안을 참

⁴¹ 朝日新聞, 2005년 9월 4일

⁴² 9·11 총선에서 얻은 자민당의 의석 비율은 산술적으로 전후 2위이며, 전체의석(480석)에서 차지하는 자민당 의석(296석)의 점유율은 61.7%이다. 1960년 총선에서 이케다 내각이 기록한 점유율 63.4%가 전후 1위이다.

의원이 부결시켜도 중의원이 다시 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석수이다.

<표 II-17> 2005년 9·11 중의원 총선의 결과

구분	자민	공명	민주	공산	사민	국민신당	신당일본	기타
9·11선거 결과	296 (+84)	31 (-3)	113 (-64)	9 (0)	7 (+2)	4 (0)	1 (-2)	19 (-14)
선거전 의석수	212	34	177	9	5	4	3	33

따라서 <표 II-17>과 같은 9·11 중의원 총선의 결과 현실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견제하던 소위 '3각 장치' 즉, 강한 야당, 이익집단로서의 '족(族)'의원 그룹, 당내 파벌 등이 무력화되었다.

특히, 일본 정치의 주요 특성인 50년의 자민당 파벌정치가 사실상 와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후 내각구성 등 인사에 있어서 파벌의 영향력을 배제해 왔는데, 파벌의 존재 그 자체가 '우정민영화 반대와 9·11 중의원 총선'에 의해 정치적 지각변동을 겪으면서 와해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예컨대, 최대 파벌이던 구(舊) 하시모토(橋本)파는 16명이 우정민영화 반란군에 가담함에 따라 제2위 파벌로 전락했고, 고이즈미 출신 파벌인 모리(森)파는 제1위 파벌로 등장하게 되었지만,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영향력은 격감하게 되었다. 아울러 제3위 파벌인 호리우치(堀内)파는 파벌회장인 호리우치 미쓰오(堀内光雄)의 탈당에 따른 내분으로 지리멸렬한 상태이고, 제4위 파벌인 가메이(龜井)파는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파벌회장의 탈당과 더불어 공중분해 되었다.

요컨대, 9·11 중의원 총선의 대승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국정

운영을 위한 권력기반 및 정치적 입지는 매우 강화되었으며,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는 보수성향의 정치공간속에서 개혁 정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06년 9월까지 구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2005년 10월 31일에 아베신조, 아소 다로 등 차기 총리 후보들이 포함된 새로운 ‘개혁 속행 내각’을 발족시켰다.(〈표 II-18〉, 〈표 II-19〉 참조)⁴³

제3차 고이즈미 내각에 해당하는 신 내각은 파벌과 관계없이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들로 구성됨과 더불어 총리 후보자로 하여금 구조개혁추진을 경쟁시키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실전형 내각’이라고도 평가되었다.

〈표 II-18〉 2005년 자민당 3역의 인사

간사장	타케베 츠토무(야마자키파)
총무회장	큐마 후로오(구 하시모토파)
정무조사회장	나카가와 히데나오(모리파)

⁴³ 朝日新聞, 2005년 11월 1일.

<표 II-19> 2005년 제3차 고이즈미 연립내각

직 위	이 름	나 이	비 고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63	중의원 의원, 전 우정성 장관, 전 후생성 장관
총무장관	다케나카 헤이조	54	참의원 의원
재무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	60	중의원 의원
외무장관	아소 다로	59	중의원 의원 전 자민당 창조회장
법무장관	스기우라 세켄	71	중의원 의원
문부과학장관	고사카 켄지	59	중의원 의원
후생노동장관	가와사키 지로	57	중의원 의원
농수산장관	나카가와 쇼이치	52	중의원 의원
경제산업장관	니카이 도시히로	66	중의원 의원
국가공안위원장 · 방재위기관리장관 · 유사법제담당장관	구초카케 히데오	76	중의원 의원
국토교통장관	키다가와 카즈오	52	중의원 의원, 공명당
관방장관	아베 신조	51	중의원 의원, 전 자민당 간사장
방위청장관	누카가 후쿠 지로	61	중의원 의원, 전 정조회장
경제재정 · 금융장관	요사노 카오루	67	중의원 의원
환경장관 · 오кина와 · 북방 장관	고이케 유리코	53	중의원 의원
소자화 · 남녀공동참획 장관	이노쿠치 구니코	53	중의원 의원
행정개혁 장관	츄마 고로키	69	중의원 의원
과학기술정책 · IT담당장관	마츠다 이와오	68	참의원 의원

III

탈냉전시대 전환기 일본의 국가전략과 대외전략

1. 신보수세력의 대외전략노선과 전략구도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여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결성될 때, 일본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일본은 1973~74년의 제4차 중동전쟁시 제1차 석유위기가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면서 걸프전의 후유증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졌고, 자위대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의 정치’를 되풀이 하였다.

일본은 걸프전에 대해 자원 및 에너지 안전보장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의도가 강하였고, 따라서 미국 주도의 걸프전 수행에는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대신 130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지불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130억달러의 전쟁비용을 지불하고도 인적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난은 기존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이 대두되도록 하였다. 즉,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은 정치변동과 정계개편의 과정속에서 걸프전시 자위대 파병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리더십 부재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⁴⁴

⁴⁴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여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이 결성될 때 일본은 1973~74년의 제4차 중동전쟁시 제1차 석유위기가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면서 걸프전의 후유증이 일본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졌고,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즉, 일본은 걸프전에 대해서 자원, 에너지 안전보장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의도가 강했고, 미국 주도의 걸프전 수행에는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대신 130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지불하였는데, 그 결과 인적공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비난은 일본에서 자위대 파병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리더십 부재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론’이 대두되도록 하였다.

특히, 정치변동기에 일본 정치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한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은 ‘리더십 부재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를 통한 정치대국화의 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쇼와세대의 신보수세력은 ① 전후 민주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그 이전의 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거사 및 대미 콤플렉스를 덜 가지는 특징을 나타내었고, 그러므로 ② 과거의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에 대하여 반성과 사죄를 표명함으로써 전후 총결산을 단행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강화론을 주창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대국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즉, 대국주의 성향을 지닌 신보수세력의 대외 전략 노선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공헌 및 역할 증대를 통하여 ‘21세기 국제지도국 일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서냉전시대의 55년체제가 ‘통상국가 일본’을 ‘경제대국 일본’으로 발전시켰다면, 탈냉전시대 1993년의 7·18 총선을 계기로 정치적 지각변동 속에 형성되는 새로운 체제는 ‘경제대국 일본’을 ‘정치대국 일본’으로의 성장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21세기의 국제지도국 일본’을 지향한 신보수세력의 국가전략은 보수대연합에 의한 국정운영의 권력기반 강화이후에 국가개혁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었고,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정치의 전개와 더불어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층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보수세력의 국가전략은 <표 III-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UN 중시 전략’과 ‘미일동맹 강화 전략’을 두축으로 하면서, 글

로벌 차원(global level), 아시아·태평양 지역차원(regional level), 국내적 차원(domestic level) 등 다차원적으로 전개되는 전략이다.

<표 III-1> 정치대국화 전략의 구도와 특징

<p>제1차원 : 글로벌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중시 전략 :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의 평화활동 적극 참여 - UN의 예산 분담금 지속적 증액 - UN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 일본유치 및 설립 - UN안전보장이사회 개편안 'G-4' 제출 ○세계ODA대국으로서 환경, 제3세계 문제, 인간안전보장(human security) 등 글로벌 정책 이슈에 ODA의 전략적 활용 추구
<p>제2차원: 아시아·태평양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지도국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간 및 다자간 안보협력 추진 - '親美入亞' 전략 전개 - 일본의 독자적 영역 확대 추구 ○미일동맹 강화 전략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안전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전략적 역할증대 추구 -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의 강화와 파워분담(power sharing) 추구 - 미일동맹의 미영동맹 수준으로 발전 추구
<p>제3차원 : 국내적 차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기제의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의 리더십 및 내각의 위기관리 기능 강화 - 정부조직법 개편 - 정보분석기관의 강화 ○안보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청의 '국방성'(또는 '방위성')으로의 승격 -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 정비 - PKO법안의 개정 및 재정비 - 일본 및 주변 지역의 유사시 관련 법제의 입법화 - 전력보유·집단지위권 행사 등을 위한 헌법 개정 ○군사력의 질적 증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의 하이테크화 - 자위대의 원거리 활동능력 강화 - MD 체제 구축 역점

글로벌 차원의 전략은 UN의 깃발아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유엔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하게 되자, 일본은 유엔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추구하게 되었고,⁴⁵ 따라서 1993년 UN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 논의가 시작되자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즉, 일본은 『1993年度 外交青書』(1994년 5월 발표)를 통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둔 능동적 외교의 적극적 전개를 강조한 후, 1994년 9월 14일 무라야마 내각의 각료간담회에서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행동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고노 요헤이 외무성 장관은 동년 9월 27일 제 49차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에서 “유엔헌장이 서명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舊敵國조항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일본은 여러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후, 진출을 위한 여건 조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즉,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는 UN 통상예산 분담금을 상임이사국 진출과 연계시켜 전략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고⁴⁶(<표 III-2>참

⁴⁵ 호소가와가 UN산하의 국제상설부대 및 UN평화협력대의 창설을 주장하고, 오자와가 UN경찰부대를 창설하여 UN평화유지활동에 종사토록 주장한 것도 유엔중시의 대외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위대와 별개로 그와 같은 조직이 정비될 경우, 일본은 헌법 제 9조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군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⁴⁶ 일본 정부는 자국이 다른 상임이사국보다도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조), 아울러 세계 정부개발원조(ODA) 대국으로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의 여러 국가들에 대한 경제지원을 확충하면서 이를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III-2> 일본의 UN 예산 분담율(%)

<2005년 7월 시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22	6.127	6.03	2.053	1.1	19.468	8.662	1.523	0.421

그러므로 일본의 UN 분담금 증액을 기대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지지하고 있고, 그 지지도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의 확산과 더불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을 전개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은 ‘6개의 상임이사국(아시아·아프리카 각 2개국, 유럽·아메리카 대륙 각 1개국)과 4개의 비상임이사국의 증원’과 ‘기존의 상임이사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되, 15년 간 거부권 행사를 유예’하는 내용의 ‘G-4 결의안’을 2005년 7월 6일 UN총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지지국의 확보를 추구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는 지지하나,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

명분으로 1994년 이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재정적 기여도에 상응하는 역할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01년의 분담금을 삭감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UN 재정기여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주시킴과 동시에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당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출에는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가장 강력한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G-4 결의안’은 아프리카 연합(AU)과의 합의에 실패하였으며,⁴⁷ 미국은 동년 7월 14일 ‘G-4 결의안’에 대한 지지 확보의 부족 및 회원간 불화 조성 등을 이유로 ‘G-4 결의안’에 반대하는 입장 표명과 더불어 ‘신임상임이사국에는 거부권을 갖지 않는 일본 등 2개국 정도, 비상임이사국에는 2~3개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미국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회원국들간의 이견, 회원국 2/3 비준이 필요한 UN헌장 개정의 어려움⁴⁸ 등 때문에 일본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은 조기에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일본은 정치대국화 전략차원에서 국제공헌 활동의 강화와 함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글로벌 차원에서 핵비확산·소형무기 규제 등의 군축활동이나 분쟁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노력 등 국제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1998년 12월 UN에 ‘인간안전보장기금(A Trust Fund for Human Security)’의 설립을 제창함과 더불어 인간안전보장(human security)을 위해 ODA의 전략적 활용 등 적지 않은 외교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차원의 전략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역할 및 영향력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일본의 전략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함께 ‘親美入亞’ 전략⁴⁹으로

⁴⁷ AU 정상회의는 2005년 7월 5일 ‘거부권 보유 6개 상임이사국과 5개 비상임이사국의 증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⁴⁸ UN 안전보장이사회 확대를 위한 UN헌장의 개정에는 9개 상임이사국과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징지워 질 수 있는데,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역할의 증대와 더불어 일본의 독자적인 영역의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미·일 지도력 분담’(power sharing)을 도모하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일본에게 수출시장 및 생산기지 수준 이상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해 가고 있는데,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를 주요 거점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일본의 아시아 중시전략은 ① 경제적 차원에서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아시아 전략적 제공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직접투자 등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② 안보적 차원에서 종전의 대소봉쇄를 위한 북방중시의 방위전략에서 아시아·태평양 주변지역의 안정 확보에 중점을 두는 전방위 형태의 안보전략으로 전환되어 전개되고 있다. 즉,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역할의 증대를 꾀하고 있는 일본은 ①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을 통하여 직접적인 역할의 증대를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② 양자간 차원에서 상호 투명도의 제고 및 신뢰구축을 위하여 한국,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과의 2국간 군사교류를 촉진·강화시키고 있고, ③ 다자간 차원에서는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전향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⁵⁰ 국내적 차원의 전략은 글로벌 차

⁴⁹ 寺島實郎, 『國家の論理と企業の論理』, 中公新書, 1998.

⁵⁰ 배정호,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국가전략·포괄적 안보전략·동북아 다자간 안보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00). 1998년 10월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부치 총리가 ‘동북아 6자회담’을 제의한 이후,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희망을 표시하고 있다.

원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차원에서 일본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치공간의 보수화 성향, 보수대연합에 의해 강화된 국정운영의 기반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제도적 정비를 단행하고,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기의 하이테크화, 자위대의 원거리 활동능력 증강, 첨단기술에 의한 군사력의 질적 증강 등을 추구하고 있고, 제도적 정비로서는 먼저 정보기관의 강화를 도모한 후,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법안의 정비와 내각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21세기 국가체제의 정비」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오부치 정권은 미·일 신안전보장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일본의 확대된 군사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보수대연합으로 강화된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1999년 5월에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법안의 정비를 단행하여 3개의 법안-「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을 성립시켰고, 동년 7월에는 총리의 국정주도권 및 내각기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법」을 성립시켰다. 나아가 2001년 4월 개혁을 기치로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안보개혁차원에서 법적 정비를 전향적으로 추진하면서, 「테러대책특별법」의 제정 및 「PKO협력법」의 개정,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3개의 「일본유사」 관련 법안 등을 성립시켰으며, 방위청의 방위성으로의 승격, 집단자위권의 행사 및 전력보유 등을 지향한 헌법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대국주의(great power nationalism) 성향을 지닌 신보

수세력은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추구하는 대외정책 노선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대외정책 노선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함께 군사적 역할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2. 안보전략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미·일동맹은 재정의됨과 더불어 질적 전환을 추구하며 전략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본의 안보전략은 그와 같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는 군사적 활동의 능력 강화를 지향하여 안보개혁 차원에서 군사력의 질적 강화와 제도적 정비를 추구하고 있다.

가. 미·일동맹의 강화

(1) 미·일동맹의 재정의와 강화

냉전시대의 미·일동맹은 극동지역에서 소련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일의 전략적 역할 분담은 미국의 주도아래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나, 1989년 동유럽에서의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지각변동에 이어 1991년말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미·일동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야 했다. 예컨대,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일본 국내에서는 ‘냉전의 산물’인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무용론’ 및 ‘오키나와 기지 철수요구’ 등의 견해,⁵¹ 무라야마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방위문제 간담회’의 미·일동맹보다 UN을 더욱 중시하는 견해⁵² 등이 나타났는데, 1995년 9월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병사의 일본 소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反주일미군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미·일동맹은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분기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일 양국에서는 미·일동맹의 약화를 우려하여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확고하게 재정립 또는 재확인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⁵³ 미국 국방부는 1995년 2월에 조세프 S. 나이(Joseph S. Nye, Jr.)가 주도하여 작성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미국의 안전보장전략」(「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1995)⁵⁴의 발표를 통하여 미·일 파트너십(partnership) 및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일본 정부는 동년 11월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1996년 이후 방위계획의 대강」(이하, 「신방위계획의 대강」이라 칭함)⁵⁵에서 일본 및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필요 불가결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신뢰성 및 기능적 유효성의 향상 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미·일 양국의 정책 표명은 양국 수뇌를 통하여 재

⁵¹ 浅井基文, 日本外交 反省と轉換 (東京: 岩波書店, 1989).

⁵² 防衛問題懇談會, 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存り方 -21世紀へ向けての展望- (1994. 8). 이 보고서에서는 탈냉전시대에는 UN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UN중시의 견해와 더불어 다자간 동맹, 다자간 안보협력 등 ‘능동적인 국제안전보장’을 강조하는 정책을 건의하였다. 즉,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보다 UN을 더욱 중시하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⁵³ 船橋洋一, 同盟漂流 (東京: 岩波書店, 2000).

⁵⁴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⁵⁵ 平成8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劃の大綱について (1995. 11).

차 나타났다. 즉, 1996년 4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일본의 하시모토 총리는 東京정상회담에서 탈냉전시대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이라고 규정하면서,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을 천명하는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⁵⁶(이하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이라 약칭함)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미·일 동맹은 ‘재확인’되고 ‘재정의’ 되었다. 즉,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의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를 계기로 미·일 동맹이 재확인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일본 언론들이나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이 공동선언의 발표를 통하여 미·일 동맹이 재정의되었다고 특징지었다.⁵⁷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미·일 안보조약’ 그 자체가 수정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더불어 ‘미·일 안보조약’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재확인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이나 안보전문가들은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범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된 것에 주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협력이 ‘미·일 안보조약’의 ‘제5조’(일본 공격시의 공동대처) 및 ‘6조’(극동지역 급변사태시의 기지제공)에서 규정한 협력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의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일본 국내외에

⁵⁶ “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의 전문(全文)은 Mike M. Mochizuki, ed. *Toward A True Alliance*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에 게재된 것을 참조.

⁵⁷ 五十嵐武士, 日米關係と東アジア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9); 船橋洋一, “日米安保 再定義の全解剖”, 世界 (1996. 5); 古川純, “アジアにおける平和の課題と安保條約‘再定義’の意味,” 法學時報 (1996. 4).

서는 미·일동맹의 재확립 및 재정의의 둘러싼 안보논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는데, 최근 미·일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일본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확대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보개혁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21세기의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미·일동맹이 재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 미·일 동맹은 재확립 이상으로 재정의되면서 강화되고 있고, 부시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고이즈미-부시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다. 즉, ‘21세기의 지도력 분담(Power-sharing)’을 지향한 미·일 동맹의 강화론은 부시정권의 출범 직후인 2001년 3월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부시-모리 미·일 정상회담에서 강조된 이후,⁵⁸ 동년 6월 30일 부시-고이즈미의 캠프데이비드 미·일 정상회담 및 2002년 2월의 부시-고이즈미 東京 정상회담,⁵⁹ 2003년 5월 부시-고이즈미 크로포드 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재확인되어 나타났다.⁶⁰

이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일 안전보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었고, 미국의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과 일본의 외무장관 및 방위청 장관으로 구성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는 2005년 2월 19일 미·일동맹의 세계화를 지향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시키는 ‘공통전략목표에 관

⁵⁸ 부시-모리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안보대화’의 확대 등 동맹 강화가 강조되었다. 朝日新聞 2001년 3월 20일, 21일.

⁵⁹ 부시-고이즈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의 확인과 더불어 ‘전략대화’의 개시를 합의한 한 뒤, 안전·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朝日新聞, 2002년 6월 30일, 7월 1일, 2일.

⁶⁰ 부시대통령은 미·일 양국의 결속을 과시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고이즈미와의 정상회담을 자신의 크로포드 개인목장에서 가졌고, 더욱이 부시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트럭에 고이즈미를 태워 목장을 안내하였다. 朝日新聞, 2003. 5월 24일, 25일.

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미일동맹의 강화는 2004년 12월 10일에 발표된 신 「방위계획의 대강」에서도 강조되었고, 21세기 미국의 신 군사전략에 의한 해외미군 및 주일미군의 재편 작업이 전개되면서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2003년 11월 25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 이후시대를 맞이해서 본토방위와 전방전개능력의 강화를 지향한 새로운 군사변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주둔 군사력의 재검토 협의를 동맹국 및 의회와 본격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즉, 미국 부시 행정부는 새로운 위협인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군사기술에 의한 장비의 경량·고도화 및 기동력·정찰력의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력의 규모 및 구성을 개편한다는 전략적 구상아래 신 군사전략의 키워드로서 군사변환(transformation)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Global Posture Review)을 제시하였다.

군사변환전략의 핵심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한 '유동성 있는 군사능력'을 지향하여 미군을 언제 어디서든지 전투가 가능한 규격화된 군(Module Army)으로 바꾸는 것이다.⁶¹ 이는 냉전시대의 해외 주둔 미군을 해외 배치군을 넘어서서 해외 기동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이와 같은 군사변환 구상 및 해외주둔 미군

⁶¹ 규격화된 군의 대표적 예로서 스트라이커 전투부대를 들 수 있는데, 스트라이커 부대는 첨단장비로 무장했으면서도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 최첨단 전차들과 함께 유사시 초대형 수송기에 실려 3, 4일만에 분쟁지역으로 투입될 수 있는 부대이다. 즉, 미국의 군사변환전략은 이와 같은 기동성을 갖춘 최첨단 전투부대를 기존 기지에 두지 않고 기동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재배치 계획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기지를 전략적 목적의 관점에서 대규모 병력전개의 근거지인 전력전개거점(PPH), 대규모 병력이 장기 주둔하는 상설기지인 주요작전기지(MOB), 소규모 상주 간부와 상당수 교체근무 병력을 포함한 전방전개기지(FOS), 소규모 연락요원과 훈련장만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안보협력 대상 지역(CSL)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울러 해외 주둔 미군의 삭감을 전개하고 있다.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15만명의 미군을 제외한 주요 해외 주둔미군의 현황은 <표 III-3>과 같은데, 부시 대통령은 2004년 8월 16일 “예측할 수 없는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주둔미군을 새로운 장소로 배치한다”고 선언함과 더불어 6만~7만 명의 해외 주둔미군의 삭감을 발표하였다. 주로 냉전시대의 최전선이었던 한국으로부터 12,500명, 독일로부터 30,000명 등 6만~7만 명의 미군병력이 삭감되는 것이다. 삭감되는 병력은 미국 본토나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지로 재배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²

<표 III-3> 해외 주둔미군의 현황(2004년도 기준)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
41,360명	40,680명	73,500명	11,965명	11,097명
육군 31,460	육군 1,600	육군 57,300	육군 2,900	육군 180
공군 9,420	공군 14,130	공군 15,650	공군 4,600	공군 9,600
해군 300	해군 5,200	해군 300	해군 4,400	해군 1,220
해병대 180	해병대 19,750	해병대 250	해병대 65	해병대 97

⁶² 朝日新聞, 2004년 8월 18일.

이처럼 미국 부시행정부의 군사변환 구상 및 해외주둔 미군 재 배치 계획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기지가 전략적 목적에 의해 전개 될 경우,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역할은 한층 강화될 것이며, 미·일의 군사적 연대의 강화에 의해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력중추로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미·일동맹의 전략적 상호의존의 강화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어 미·일 양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면서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즉, 미·일 양국은 탈냉전시대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고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정치적·경제적 안정성은 높지만,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의 존재, 다수국가의 군사력의 증강, 한반도 긴장의 계속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잔존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미·일의 전략적 인식은 1992년 1월의 ‘東京宣言’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차원(regional level) 및 글로벌 차원(global level)에서의 미·일 동반자의 관계로 표명되었고,⁶³ 1995년 2월에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미국의 안전보장전략』이나 동년 11월에 발표된 일본의 『신방위계획의 대강』을 통하여 한층 강조되었다.

⁶³ 부시 미국대통령은 1992년 1월 8일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9일 발표된 ‘東京宣言’을 통하여 미·일 간의 “세계적 동반자의 관계”를 수립할 것을 천명하였다.

나아가 미·일 양국의 전략적 상호의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1996년 4월의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에 의한 미·일동맹의 재정의와 함께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작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미국 부시 행정부의 미·일동맹 강화정책, 일본 고이즈미 연립내각의 대미 편중정책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예컨대,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일본정부는 미국의 테러전 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파병⁶⁴과 함께 ‘테러응징 지원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미·일 군사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본 주변지역 유사’ 대비 3개의 법안에 이어 ‘일본 유사’ 대비 3개의 법안(2003.6.6)과 더불어 미·영군의 지원을 위한 ‘이라크 파병법’(2003.7.26)을 성립시켰다.

이와 같은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의 강화는 앞에서 언급한 해외미군 기지의 재편 구상에 따른 주일 미군의 재편 작업을 통하여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해외미군 기지의 재편구상과 더불어 전력전개거점(PPH)의 역할 수행을 위한 주일 미군의 재편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미군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력증추가 되고, 미·일동맹은 일본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함께 태평양관 미·일동맹 수준으로 성장·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일동맹의 전략적 상호의존의 강화와 관련하여 미·일 양국이 서로 상대방에게 가지는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일본을 보면 미국에 있어서 일본은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전개해 가는데 아주 주요

⁶⁴ 일본은 대테러전 협력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戰에 자위대 1,500명, 함정 6척을 파견하였다.

한 동반자이다.⁶⁵ 일본의 전략적 존재의 구체적 가치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미국이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가는데 재정적 지원자이다. 일본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면서도 미국 이외의 상임이사국보다도 더 많은 통상예산을 분담하고 있다. 즉, 일본의 UN 통상예산 분담률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이다.⁶⁶ 또, 일본은 주일미군 지원금으로서 1995년도에 45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였고, 1995년 이후 5년 동안에는 약 25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둘째,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전개하는데,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중앙거점이다. 즉,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이며 전진배치 안보전략의 주춧돌이다. 이는 주일미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미국은 미·일동맹체제를 통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보다 깊이 연결될 수 있다. 즉, 미·일동맹체제는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국가로서 보다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나아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행동능력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⁶⁷

넷째, 미국이 세계전략 및 아시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중국

⁶⁵ 미국 국무부 윈스턴 로드 東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차관보는 “책임분담의 성숙된 균형에 바탕을 둔 글로벌차원의 동반자관계”를 형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Economist*, April 3, 1993, pp. 34~35.

⁶⁶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UN 통상예산 분담금을 지출하였고, 그 금액도 계속해서 증액시켜 왔다. 2000년도 일본의 UN 통상예산 분담률은 미국(25%)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상임이사국의 분담률 합계(13.7%)를 상회하는 20.57%이고, 분담액은 약 2억 1,640만\$이다.

⁶⁷ 후나바시 요이치, “나이(NYE) 이니셔티브의 내막,” 사상 (1996년 여름호).

을 견제하여 봉쇄하거나 또는 포용할 경우에 일본은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이다. 2003년 7월 28일 미국 의회에 제출, 보고된 국방부의 연례보고서 「중국의 군사력 평가 보고서」(「Annual Report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3)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장래의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고 대만문제와 관련해서는 무력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아래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의 대폭 증강 등 군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⁶⁸ 이는 향후 미국의 對日本 및 對臺灣 정책의 전략적 강화와 함께 對中國 견제정책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로 인하여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은 국가전략연구소(INSS)의 대일 정책보고서 「미국과 일본: 성숙된 동반자를 지향한 진보」(「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2000)⁶⁹ 및 랜드연구소(RAND)의 정책보고서 「미국과 아시아」(「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Force Posture」, 2001)⁷⁰의 정책제언처럼, 미·일 동맹 강화 및 일

⁶⁸ Annual Report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3. 7.28)

⁶⁹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Studie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2000. 10). 동 보고서는 미국 국방대학(NDU)이 포스트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2001.1)에 대비하여 구성한 초당적 연구그룹에 의해 작성되었다. 초당적 연구그룹에는 공화·민주당 행정부에서 국방차관보를 역임한 Richard L. Amitage(1983~86), Joseph S. Nye(1994~95)를 비롯하여 CRF의 Michael J. Green 연구원 등 총 16명의 아시아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따라서 일명 「아미티지 보고서」(Amitage Report)라고도 불리고 있다.

⁷⁰ RAND, *The United States and Asia: Toward a New U.S. strategy and*

본의 역할증대 전략을 두드러지게 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라크전과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의 공조 강화 등을 계기로 일본에게 국제적 역할의 확대를 요청함과 더불어 대외적 군사 활동 및 자위대의 전력 증강을 적극 지원하면서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안보개혁을 볼 때, INSS의 『미국과 일본: 성숙된 동반자를 지향한 진보』(2000)는 특히 주목해야 할 정책보고서로 평가된다. 同정책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에는 한반도의 취약한 데탕트, 대만해협의 갈등, 인도대륙과 인도네시아 지역의 혼란 등 안보환경의 잠재적 위협요인과 더불어 중·러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미·일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아래 ① 미국은 일본의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여야 하고, ② 일본 헌법 해석상 금지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함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③ 비용분담(Burden-sharing)만큼 ‘지도력의 분담’(Power-sharing)도 병행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하였다.⁷¹ 이 정책보고서의 작성에 참가하였던 공화당계의 전문가들은 제1기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외교·안보정책 분야의 중요 요직을 맡아 ‘지일파’그룹의 핵심세력을 이루면서 미·영동맹 수준으로 미·일동맹의 강화⁷²를 주도하였다.⁷³

Force Posture (2001).

⁷¹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Studies, *The Unti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2000. 10).

⁷² 2001년 5월 8일 Richard L. Amitage 국무부 장관은 “미·일 동맹을 현재의 미·영 동맹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싶다”며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데, 일본에게 있어서 미국의 전략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일 동맹체제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역할증대를 도모하고 국제지도국으로 성장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렛대이다. 일본은 정치대국화 또는 국제지도국화 전략차원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미국은 영국⁷⁴과 더불어 일본의 강력한 지지국이다.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둘째,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가 큰데,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일본이 국제지도국화를 지향하여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추구하는데 전략적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최근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들의 안보위기의식 속에서 군비 증강 등 하드 파워의 증강뿐 아니라 법적 정비 등 소프트 파워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군사력의 증대 및 패권주의 추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주변 정세변화에 일본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미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이는 미·일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의 일치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 양국은 이상과 같은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미·일 동맹을 미·일동맹 수준으로의 발전을 지향하여 ‘역할분담’ 또

⁷³ 리차드 아미타지(Richard L. Amitage), 윌포비츠 폴(Wolfowitz Paul H), 제임스 켈리(James A Kelly), 토켈 페터슨(Torkel L. Patterson) 등은 각각 국무부 부장관, 국방부 부장관,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수석국장 등의 주요 보직을 맡아 부시 정권의 ‘知日派’ 그룹의 핵심세력을 이루면서 미·일 동맹의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⁷⁴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wl/20030611/pressian/pr2003.03-6-17>>.

는 ‘책임분담’에서 ‘지도력 및 권한의 분담’(Power-sharing)⁷⁵을 향하여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2005년 2월 19일 미국의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과 일본의 외무장관 및 방위청장관으로 구성된 미·일안정보장협의위원회(2+2)는 미·일동맹의 세계화를 지향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시키는 ‘공통전략목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표 III-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동선언에 의하면, 미일의 공통전략목표는 글로벌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이라크·인도양·쓰나미 등에서의 협력,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국제테러의 방지 및 근절 등을 지향하여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지역차원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군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대만해협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촉진 등을 주요 전략목표로 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 강화, 중국의 대만 무력행사 가능성 억지 등의 전략적 추구를 도모하는 것이다.

⁷⁵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Studies, *The Unti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2000. 10).

<표 III-4> 미일의 공통전략목표

지역의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핵·탄도미사일·불법활동·일본인납치 등 북한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의 평화적 해결 추구 ○세계 및 지역에서의 중국의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의 환영,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 ○대만해협을 둘러싼 문제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촉진 ○러시아의 건설적 관여의 촉진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을 통한 러일관계의 완전 정상화
세계의 전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기본적인 가치의 추진 ○국제평화협력활동 및 개발지원에 있어서의 미일파트너십의 강화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삭감과 불확산의 추진 ○테러의 방지 및 근절 ○일본의 UN안전보장상임이사회 진출 실현 및 안전보장상임이사회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 추구 ○세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유지 및 향상

이와 같은 미·일의 공통전략목표의 인식은 미일동맹의 세계화와 더불어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이 한층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주일미군의 재편과 자위대의 역할·임무·능력조정 등에도 투영되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로 나타났다.

후텐마(普天間) 비행기지의 이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2005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에서는 미·일의 군사적 일체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연대의 전략적 목적 아래에서 주일미군 기지의 역할 재조정, 미군과 자위대의 합동훈련 확대, 군 기지의 공동이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일미군의 재편에 관한 대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⁷⁶

주일미군의 재편·재배치 대강의 핵심 사항은 미·일의 군사

적 일체 및 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하는 기지의 ‘공유’, ‘공동 사용’ 등인데, 주요 내용은 <표 III-5>와 같다.

즉, 인도양까지 담당하는 제1군단을 보다 전선(前線) 가까이 두기 위해 제1군단 사령부를 워싱턴주에서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縣)의 자마(座間)지역으로 옮기고, 아울러 자마 기지에 일본 육군 자위대의 핵심부대인 ‘중앙집단사령부’를 신설·배치함으로써 자마 기지가 대테러 작전과 동아시아 사령탑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이는 미·일의 군사적 연대 강화에 따른 미·일공동사령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일의 공동 대처를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총사령부를 요코다(横田) 기지로 이전시키고, 요코다 기지에 미사일 공동 방어를 위한 공동작전센타를 설치한다. 아울러, 중국·북한을 겨냥해 오키나와뿐 아니라 인접한 큐슈지역에도 미·일의 공동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미군의 공중급유기12대를 큐슈(九州) 지역의 가고시마(鹿兒島) 현(縣)에 있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가노야(鹿屋) 기지로 이전하고, 미군 태평양 항공모함의 조성을 위해 가나가와(神奈川) 현(縣) 아츠키(厚木) 기지에 있는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부대를 이와구니(岩國) 기지로 이전하며, 이와구니(岩國)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화상 데이터 수집기를 미군의 아츠키(厚木) 기지로 이전한다.

미·일 양국은 이와 같은 주일 미군의 재편·재배치 계획이 협상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겪었지만, 주일 미군의 재편·재배치 계획이 확정된 직후, 미국은 미·일 연합군 유사체제의 전력 증강

⁷⁶ 朝日新聞, 2005년 10월 30일.

을 위해 처음으로 2008년에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⁷⁷을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요컨대, 주일 미군의 재편·재배치 계획은 미·일동맹의 세계화에 따른 전략증강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지의 공유·공용을 통해 연대 강화의 구상을 나타내고 있는 주일 미군의 재편·재배치 계획은 ①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통의 전략목표를 지향하면서, ② 지역차원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경계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미·일공동사령부’의 설립을 지향하는 군사적 연대의 강화를 추구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 미·일공동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지휘권을 행사하며,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⁷⁷ 미국 해군이 총 9척을 보유하고 있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1975년에 처음 배치되었는데, 길이 330m, 최대 폭 77m로써 F-14 전투기 등 비행기를 80대 이상 적재할 수 있으며, 최대 시속은 30노트이다.

<표 III-5> 주일미군 재편안의 주요내용

구체적인 안	전략적 목적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제1군단 사령부를 통합사령부(UTX)로 개편함과 더불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縣)의 자마(座間)지역으로 이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양까지 담당하는 제1군단 사령부를 전선(前線) 가까이에 둬으로써, 자마 기지가 대테러 작전과 동아시아 사령탑 역할을 수행토록 함. ○일본 육군 자위대의 핵심부대인 '중앙집단사령부'가 배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의 군사적 연대 강화, - 미·일공동사령부 탄생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총사령부를 요코다(横田) 기지로 이전시키고, 요코다 기지에 미사일 공동 방어를 위한 공동작전센터를 설치함.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
오키나와 후덴마(普天間) 기지의 미군의 공중급유기12대를 큐슈(九州) 지역의 가고시마(鹿兒島) 현(縣)에 있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가노야(鹿屋) 기지로 이전함.	○중국·북한을 겨냥해 오키나와뿐 아니라 인접한 큐슈지역에도 미·일의 공동기지를 확보
가나가와(神奈川) 현(縣) 아츠키(厚木) 기지에 있는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부대를 이와구니(岩國) 기지로 이전하고, 이와구니(岩國)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화상 데이터 수집기를 미군의 아츠키(厚木) 기지로 이전함.	○현지부담의 경감 및 태평양 항공모함 2척과의 조응.
오키나와의 코트니 캠프에 있던 제3 해병원정군 사령부를 고펜으로 이전함. - 일본내 미군 해병 병력 15,000명 가운데 7,000명 정도를 감축.	○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제의 부담 경감

나. 일본의 안보전략과 군사력의 질적 증강

일본은 '일본 열도의 비전장화'라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해상방공체제, 미사일 방공체제, 테러 등의 특수전 및 IT혁명 대비체제 등을 추구하고 있고, 아울러 확대된 군사활동을 위한 원거리 작

전능력의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1980년대 일본은 ① SEA LANE 방위와 3해협 봉쇄를 위한 미·일 전략적 역할 분담, ② 섬나라라고 하는 지정학적 요소 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제공권·제해권의 확보를 위하여 해상방공체제의 확립을 지향하였다. 그와 같은 해·공군력의 증강에 역점을 두는 일본의 전략적인 군사력의 정비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특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미사일 방공체제의 확립, 테러 등의 특수전 및 IT혁명 대처능력 강화, 확대된 군사활동을 위한 원거리 작전능력의 보강 등에 중점을 둔 군사력의 질적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정비계획의 분석을 통하여 안보전략과 그에 따른 군사력의 질적 증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990년대 전반(前半)의 군사력 정비계획인 ‘199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1991~95)을 살펴보면, ‘199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국제환경의 일반적인 변화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1980년대의 군사력 정비계획인 ‘1981 중기업무전적’이나 ‘199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추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상방공체제를 지향하여 해·공군의 군사력 증강에 역점을 둔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하면서 정보·지휘·통신 능력 등 후방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었다. 22조 1,770억 엔의 경비가 소요된 ‘199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 나타난 군사력 정비의 방향성은 21세기를 향하여 1990년대에 전개된 일본 군사전략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무기의 하이테크와 더불어 첨단기술에 의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한다는 점이었다.⁷⁸ 예컨대, 다연장로케

⁷⁸ 배정호, “신국제질서기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국가전략,” 이기택 외, 전환기의

트시스템(MLRS) 및 C3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ce)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최신 이지스(AEGIS)구축함의 건조, 공중경계 관제기(AWACS)의 구입, F2의 미·일 공동개발 등은 일본이 재정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꾀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는 일본 안보정책의 기조는 1995년 11월 28일의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1995 방위계획의 대강」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1976년에 「방위계획의 대강」이 발표된 이후, 19년 만에 개정된 「1995 방위계획의 대강」은 ‘199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검토,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방위문제 간담회’의 정책보고서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존재방식-21세기를 향한 전망-」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탈 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환경을 맞이하여 일본이 추구해야 할 안보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본 전략구도는 육·해·공의 자위대 병력을 20%감축⁷⁹하는 대신, 다양한 사태에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① 합리화, ② 효율화, ③ 콤팩트화, ④ 기능의 충실과 질적 향상, ⑤ 탄력성 확보 등을 추구하여 군사력을 질적으로 증강시키고 아울러 정보·지휘·통신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1996 방위계획의 대강」에서 제시한 군사체제의 정비를 지향하여 일본은 24조 2,300억엔⁸⁰의 경비가 소요되는 ‘1996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서울: 일신사, 1996), pp. 299~320.

⁷⁹ 육상자위대의 경우는 사단과 여단의 개편과 더불어 18만명에서 16만명으로 삭감된다. 즉, 육상자위대는 상설자위관 14만 5천명, 즉응 예비자위관 1만 5천명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1997年度 防衛白書.

⁸⁰ ‘1996 中期防衛力整備計劃’의 예산은 1995년 12월 책정 당시에는 25조 1,500억엔이었으나, 1997년 12월 10일에 열린 각의에서 9,200억엔 삭감되었다.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1996-2000년)을 추진하여 거의 달성하였고,⁸¹ 군사력의 상당한 질적 증강을 이루게 되었다. 즉, 항모급 상륙함 '오스미'(8,000톤급), 조기경보기(E2C) 13대, 최고의 전함 AEGIS⁸² 4척을 보유하기에 이르렀고, 조기경계 관제기인 AWACS 4대를 운용하게 되었으며,⁸³ 아울러 최신예 지원전투기 F2의 미·일 공동개발의 완료 및 실전배치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외에 일본은 1998년 8월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사건의 영향을 받아 첩보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하였고,⁸⁴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TMD)를 미국과 공동연구하게 되었다.⁸⁵ 즉, 일본은 1995년 2월 미국측이 제의한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TMD)'의 공동연구에 참여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한데 이어, 1998년 9월에 '미·일 안전보장 협의 위원회'(SCC)에서 해상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NTWD: Navy Theater Wide Defense)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합의하였고,⁸⁶ 1999년 8월에는 미국과

內閣官房長官談話 (1997. 12. 19)

⁸¹ 2000年度 防衛白書.

⁸² AEGIS함은 미국의 RCA社가 1969년에 개발한 미국의 주력함으로써 360도 3차원 탐지·요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1척당 가격은 7억 달러이다.

⁸³ 방위백서 등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방위청의 관련 관료들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1997년부터 AWACS에 대한 시험비행을 시작하였다.

⁸⁴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4~5년 내에 군사시설의 정찰이 가능한 첩보위성 및 관련기술을 도입하여 방공체제(防空體制)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이를 일본 정부에 권고하였다. 따라서 1998년 11월 일본정부는 이를 토대로 각료회의에서 2002년까지 첩보위성 4기를 개발할 것을 결정하였다.

⁸⁵ TMD 공동연구의 기간은 2년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서의 유효기간이 5년 간이므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朝日新聞, 1999년 8월 15일.

⁸⁶ NTWD는 이지스艦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대기권 밖에서 敵의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방어체제이다. TMD 유형에는 NTWD 이외에 '지상배치 戰域 高高度 방어체제'(THAAD), 대기권 미사일 요격(저층 방어)체제로 '패트리어트 미사일·해상배치 방어체제(NAD)' 등이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의 연구·개발을 위한 5개년 협정에 서명하였다.⁸⁷ 이후, 일본은 미사일방어(MD) 개발·연구에 전향적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2006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6-2010)」에서는 미사일방어(MD)의 구축에 최대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이 MD에 참가하는 전략적 목적은 ① 북한 미사일 뿐 아니라 중국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공망을 확충하기 위함이고, ②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③ ‘파워의 분담(power sharing)을 지향하여 미·일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일본은 「1995 방위계획의 대강」에서 제시한 군사체제의 완성을 위하여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1~2005년)」을 추진하였다.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명시된 주변사태 대응체제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자위대의 행동지평을 확장시키는 전략적 목적에 따라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려는 계획이다.⁸⁸ 즉, 방위청은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하여 원거리 작전능력의 보강, 테러 등 특수전에 대한 대처

⁸⁷ 미·일은 SM-III 미사일, NTWD에 사용되는 요격미사일의 개량과 미사일 탐지기술, Advanced Kienetic Warhead, 미사일 노즈콘(Nose Cone)의 경량화, 2색 적외선 탐지기 등 주로 해상층 방어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미·일은 1999년에 각각 3,600만 달러와 8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손영환·김종국, 「이스라엘/일본의 미사일 방어구상 연구」(서울: 한국 국방연구원, 1998); Robert Wall, “U.S., Japan agree on cooperative missile defense,” *Aviation Week and Space Technology* (23 August, 1999); 전성훈, 미·일의 TMD구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서울: 통일연구원, 2000).

⁸⁸ 西元徹也,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への期待,” *デイフェンス* (2000年 秋季號).

능력의 강화, IT혁명에 대한 대처 능력의 강화 등에 역점을 두면 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방위청은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기간중에 최신 에 지원전투기 F2 를 실전 배치하게 되었고,⁸⁹ 전투기의 작전반 경을 확대하기 위해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였으며,⁹⁰ 또 UN 평화 유지 활동 및 국제 긴급구조활동 등의 목적을 위해 항속거리 5,000~7,000Km의 장거리 수송기를 자체 개발하였다. 아울러, 방 위청은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해상 경비체제를 강화한다는 전략 적 목적에 따라 호위함·수송함의 대형화 계획과 미사일 고속정 증강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5,000톤급 호위함을 10,000톤급으로 교체함과 더불어 10,000톤급 항공모함 헬기 호위함을 건조하였 고, 아울러 비상사태시 미군에 대한 해상 보급능력의 향상을 위 해 13,500톤여급 대형 수송함을 자체 건조하였으며,⁹¹ 신형 고속 정을 동해기지에 배치하였다.⁹² 그리고 일본정부는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중점 추진 목표중의 하나로 제시된 게릴라·

⁸⁹ 1995년 12월 14일 일본 각료회의는 F2 130기의 국산 생산계획을 결정하였다. 즉, 일본은 최신에 지원전투기 130기를 실전 배치하게 되는 것이다.

⁹⁰ 朝日新聞, 2000년 12월 16일, 讀賣新聞, 2000년 12월 16일. 공중급유기 도입문 제는 그 동안 일본 정계 내에서 專守防衛 원칙 위배 여부를 놓고 정치쟁점이 되어 왔던 사안인데, 2000년 12월 15일 일본정부는 1대당 238억엔 하는 공중 급유기를 「200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기간중에 4대 도입하기로 결정하였 다.

⁹¹ 2000년 1월쯤 일본은 수송함(LST) 8,900톤급 1척, 2,000톤급 4척, 소형 수송함 (LSU) 590톤급 2척, 수송정(LSU) 420톤급 2척을 보유하는 수준에 있다.

⁹² 신형 고속정은 최고시속 44노트(80km)의 200톤급으로써 對艦 유도 미사일, 76미리·12.7미리 소형 기관포 및 야간 적외선 투시경을 탑재하게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신형 고속정을 3척 1개 편대로 마이루즈·사세보 기지에 배치시킴으로써 현재의 훗카이도 편대와 함께 3개 편대 운영체제를 갖출 계 획인데, 2001년부터 2척씩 건조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청은 이를 위하여 1999 년 부터 매년 방위예산에 190억 엔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생화학전 대응태세 구축을 ‘미국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시켜 추진하였다. 즉, 2001년 11월 일본정부는 중앙 정부 14개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되었던 ‘핵·생화학 테러 대처 협의회’의 장관급 협의회로 격상, ‘생화학 테러 대응 기본방침’ 결정 등과 더불어 제릴라 및 생화학전 대응능력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나아가 방위청은 이와 같은 무기체계의 증강에 이어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의 조직, 장비체계 등 근본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였다.⁹³ 즉, 일본정부는 2004년 12월 10일 각료회의에서 향후 10년간 안보정책의 지침이 되는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을 결정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사적자문기관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신 「방위계획의 대강」의 내용이 구체화된 시점인 2004년 7월 27일의 회합에서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을 위한 논점을 정리·발표한 바 있는데, 일본정부는 2004년 12월 10일에 신 방위계획의 대강과 함께 2006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6~2010)」,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에 관한 관방장관의 담화 등을 함께 발표하였다. 일본정부는 1976년에 최초로 「방위계획의 대강」을 수립·전개한 뒤, 19년만인 1995년에 개정하였고, 나아가 2004년 12월 10일에 신 「방위계획의 대강」을 수립·결정한 것이다.

「2004 방위계획의 대강」은 안보환경에 관한 인식에서 ① 글로벌 차원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확산의 진전·국제 테러조직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 및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② 동북아 지역차원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향을 안보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일본 방위에 이어

⁹³ 동아일보, 2001년 9월 12일.

국제안보환경의 개선을 새로운 안보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위대의 국제협력의 중시와 더불어 21세기 국제지도국을 지향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4 방위계획의 대강』은 9·11테러 이후의 『방위계획의 대강』으로서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처와 더불어 자위대의 해외활동의 본격화를 지원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증강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국제정세와 군사력의 관점에서 『1976 방위계획의 대강』, 『1995 방위계획의 대강』 등과 비교해 보면 <표 III-6>과 같다.

<표 III-6> 「2004 방위계획의 대강」의 비교 특징

	국제정세	방위력
「1976 방위계획의 대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소를 중심으로 한 동서 대립의 구도. ○일본주변에는 미·소의 세력 균형과 미·일안보체제가 일본에 대한 침략 방지에 중요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 방위력 구상을 바탕으로 한정적이고 소규모 침략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력으로 대처함. ○자력 대처가 곤란한 경우,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대처함.
「1995 방위계획의 대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전의 종결에 따른 동서 군사대립 구도의 해체. ○세계적 규모의 무력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대량살상무기·미사일 등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위협이 증대함. ○불투명·불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 방위력 구상을 답습하고, 스스로 '힘의 공백'을 만들지 않음. ○일본 주변지역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미·일안보정상체제의 효과적 운용을 통하여 적절하게 대응함.
「2004 방위계획의 대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확산의 진전, 국제 테러조직의 활동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 ○북한은 지역안전보장의 중대한 불안정 요인. ○중국은 군 현대화와 함께 해양활동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금후 주목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방위에 이어, 국제안보 환경의 개선을 새로운 목표로 추구함.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대비하여 국제평화협력 활동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가함. ○일본 군사력의 다기능·탄력성·실효성을 추구함.

즉, 「2004 방위계획의 대강」은 ① 안보환경에 관한 인식에서 글로벌 차원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확산의 진전·국제테러조직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 및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동북아 지역차원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향을 안보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② 일본 방위에 이어 국제안보환경의 개선을 새로운 안보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자위대의 국제협력의 증시와 더불어 21세기 국제지도국을 지향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대비가 가능하도록 일본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의 추구하고 더불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아래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주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일본의 안전에 필요불가결한 미일안전보장체제를 한층 전략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4 방위계획의 대강」은 일본 군사력의 강화 방향에 관하여 즉응성·기동성·유연성·다목적성을 지향하여 첨단 군사기술·정보능력을 바탕으로 한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이며 실효성이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2004년 12월 10일 「2004 방위계획의 대강」과 함께 발표된 「2006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6~2010)」은 ① 제도적 차원에서는 통합운용 능력의 강화, 육상자위대의 기동성 강화,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부대·잠수함부대 등의 재구성, 항공자위대의 공중급유·수송부대의 신설 등을 추구하고, ② 장비 강화의 차원에서는 이지스함의 미사일 방어(MD) 능력 강화, 페트리어트의 능력 향상, 미사일 탐지·추적 능력의 강화, 구난 헬기의 공중급유를 위한 C130 수송기의 공중급유기능 부착, 생화학 무기의 공격에 대한 대처능력의 강화, P3C 초계기 및 F4 전투기의 후속기 정비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6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6~2010)」에서는 미사일 방어(MD)체제의 구축에 최대역점을 둘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요컨대, 이와 같은 일본의 군사력의 증강 노력은 ①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군사전략이 조기경계 및 전방대처를 위하여 전략지정학적 차원에서 해상방공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미사일 방공체제의 구축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② 테러 등 특수전 및 IT혁명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③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에 따른 일본의 역할 증대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함이다. 아울러 ④ 독자적 영역의 확대를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군사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 일본의 군사활동의 확대와 제도적 정비

일본 정부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발전에 따른 확대된 군사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력의 질적 증강이라는 ‘하드 파워(hard power)’의 증강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정비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정치공간의 신보수화 성향, 보수대연합에 의해 강화된 국정운영 기반 등의 전략적 활용을 꾀하면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 조직 정비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정치적 역할의 확대와 관련, 일본 정부의 조직 정비 노력은 먼저 국가정보기관의 역량 강화작업에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1997년 1월 20일 종합정보기관인 ‘통합정보본부’를 창설하였고, 1998년 12월 28일에는 ‘방위 정보회의’를 설치하였으며, 1999년 1월 11일에는 ‘내각 정보회의’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2001년 1월 6일 중앙부처의 개편이 시행됨을 계기로 정보

기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1995 방위계획의 대강」의 수립을 계기로 통합막료회의 산하에 설치된 ‘통합정보본부’(직원수 약 1천 6백명)는 정보수집 및 분석의 일원화를 위하여 방위청의 내국과 통합막료회의, 육·해·공 자위대의 정보부문 등 기존의 정보조직을 하나로 통합시킨 ‘미국 국방정보국(DIA)’과 유사한 기관이고,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라 발족한 방위청의 ‘방위 정보회의’는 위기 발생시 ‘정보본부’에서 수집·분석한 동북아 전략정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총리에게 자위대 출동여부를 신속하게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각 정보회의’는 북한정세 등 주요 정보를 수집·분석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1999년 7월 ‘정부조직 개편법’의 성립과 더불어 2001년 1월부터 총리의 국정주도권 및 내각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독자적 정보능력의 제고를 위한 군사위성정보 처리능력의 강화, 내각정보 조사실의 지위 격상, 외무성 국제정보국의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고, 나아가 안보정책 분야의 통합관리를 위해 방위청을 방위성 또는 국방성으로 승격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⁹⁴ 즉, 일본 정부는 1999년 4월 내각 관방 산하에 군사첩보위성의 활용 강화를 위한 ‘첩보수집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 2002년부터 보유하게 될 첩보위성 수집 정보의 분석·관리를 위한 ‘위성 정보센터’의 신설을 꾀하고 있고, 아울러 총리 직할의 내각정보조

⁹⁴ 일본의 연립정권내 보수세력들은 2000년 8월 8일에 참의원내에 「방위성 설치 추진 의련(議聯)」을 발족한 데 이어 동년 11월 28일 自民·公明·保守 3당간 「省 승격 간담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방위성으로 승격될 경우, 외무성(국제 안보협력·조약), 통산성(방위예산), 내각안보회의(위기관리) 등의 여타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안보정책 분야 업무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사실을 지위격상시켜 국가정보네트워크의 정점기관으로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⁹⁵ 외무성 국제정보국의 정보수집·분석기능의 강화를 위해 대폭적으로 인원을 확충시키고 있다.

(2) 법적 정비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대내외적 활동 강화를 위해 법적 정비를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강화를 위해 안보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의 정비, ‘테러대책 특별법’의 제정, PKO 협력법의 개정, 유사법제의 정비 등을 성립시켰고, 집단자위권 행사 및 전력보유 등을 위한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의 정비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2차 중간 보고안이 발표된 직후, 1997년도 방위백서를 통하여 제기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방위백서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주변국가에 대한 자위대의 작전지침과 관련된 긴급대응책과 일본 주변유사에 대비한 법제의 정비를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이 실제상황에서 시행되려면 ‘자위대법’, ‘유엔 평화 유지활동(PKO)법’, ‘해상 보안청법’, ‘항만법’, ‘항공법’ 등 최소한 20여개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고 한다.⁹⁶ 따라서, 1999년 5월에 보수 연립정부는 「미·

⁹⁵ 국가정보관리체계의 일원화 작업과 관련, 내각조사실은 국가정보네트워크의 정점기관으로서 지위격상이 이루어졌다. 즉, 내각정보조사실의 영어명칭이 Cabinet Information Research Office → Cabinet Intelligence & Research Office로 변경됨과 더불어, ‘내각조사실장’의 명칭도 ‘내각정보관’으로 변경되었고 직급도 차관보에서 차관급으로 직급 격상되었다. 따라서, 내각정보관은 공안조사청, 외무성의 정보조사국 등 각 정보기관의 수집내용을 종합하여 총리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 신방위협력지침』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을 성립시켰고, 이어 2000년 10월말에는 ‘선박조사 활동법’을 성립시켰다. 즉, 자민-자유 2당 연립정부는 야당 공명당과의 정책연대 아래 ‘북한의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 및 ‘북한 공작선의 영해 침투사건’을 계기로 일본내 대북한 위협인식이 상당히 제고되고 있는 분위기를 활용하여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3개 법안 즉,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 개정안’을 1999년 5월 24일에 최종적으로 성립시켰고, 자민-공명-보수 3당 연립정부는 2000년 10월 30일에는 ‘주변사태법’에서 삭제된 ‘선박조사 활동법’을 성립시켰다.⁹⁷ 이로써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에 자위대는 주일 미군의 병참지원 등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40개의 항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일본 주변지역의 유사시’에 자위대 활동을 보장하는 법제를 정비한데 이어, ‘일본 유사시’에 자국 영토내에서 자위대의 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유사법제의 정비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유사법제는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의 원활한 부대이동, 진지구축 및 필요한 토지사용, 물자수송, 인력동원 등을

⁹⁶ 예컨대 자위대법의 경우는 제82조, 제83조, 제89조, 제93조, 제95조, 제99조, 제100조 6, 제100조 7, 제100조 8, 제100조 9가 개정될 것임.

⁹⁷ 원래 선박검사조항은 「주변사태법」의 원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유엔안보리 결의 포함’ 문제와 관련하여 자민·공명당과 자유당간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주변사태법」의 원안에서 삭제되었다. 즉,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발동되면, 해상자위대는 선박검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원안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2000년 10월 30일에 성립된 「선박조사 활동법」에서는 ‘旗國(선박이 소속된 국가)의 동의’를 얻어 선박조사 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능케 하는 관계 법령을 통칭하는 것인데, 『1999년도 방위백서』, 『2000년도 방위백서』, 『2001년도 방위백서』에서는 유사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따라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2001년 5월 내각관방 산하에 외무·총무·국토교통성 및 방위청 관계자 15명으로 구성된 ‘유사법제 검토팀’을 구성하도록 한 뒤,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시켰다. 이어 고이즈미 연립정부는 2001년 9월에 발생한 미국 뉴욕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동년 10월 ‘테러대책 특별법’을 제정하였고,⁹⁸ 동년 11월 ‘대미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테러대책 특별법’의 제정 및 ‘대미 지원 계획’의 작성과 더불어 일본 자위대는 분쟁 지역에서도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고이즈미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일본정부는 연립 3여당과 야당 민주당의 협력아래 동년 12월 7일에 자위대의 무기사용 제한 완화, UN평화유지군(PKF) 참가 허용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PKO 협력법’의 개정 법안을 최종 가결, 성립시켰다.⁹⁹ 그리고 고이즈미 연립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감행될 경우, 자국 영토내에서 자위대의 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2003년 6월 6일에 일본 유사시에 대비한 3개의 법안을 성립시켰다. 즉,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을 성립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일본 및 주변지역 유사시에 대비

⁹⁸ 『테러대책 특별조치 법안』은 2001년 10월 18일 衆議院에서 가결된 뒤, 동년 10월 29일 參議院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써 성립되었다. 朝日新聞, 2001년 10월 18, 19, 29, 30일.

⁹⁹ 1992년 6월에 제정된 『PKO협력법』은 ‘PKO 5원칙’ 즉, ① 정전합의, ② 당사국의 일본 참가 동의, ③ 중립성 유지, ④ 이상 3원칙 미 충족시 철수, ⑤ 자위대원의 생명·신체보호에 필요시에만 무기 사용 등에 따라 과병요건 및 활동범위를 제한하였다.

한 법안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중·참의원 양원에 설치된 ‘헌법조사회’가 2000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마침내 2005년 4월 헌법조사회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나아가 동년 8월 1일 자민당 헌법개정 시안이 마련되면서 한층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라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자위대의 국제공헌 역할 확대 등을 명분으로 헌법 9조 1항의 ‘전쟁포기’, 2항의 ‘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부인’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 헌법조사회 최종보고서에서는 ① 9조 1항의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나타났고, 개별자위권은 인정하는 견해가 나타났으며, 아울러 ②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3분되어 나타났으나, 전체로 보면 인정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지는 견해가 나타났다.¹⁰⁰ 그리고, 2005년 8월 1일 발표된 자민당 헌법개정 시안에서는 9조 1항은 유지하고, 2항은 삭제하며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에 명기치 않고 해석을 통해 허용한다는 방침을 나타내었다. 즉,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는 영구히 행하지 않는다’는 현행 9조 1항은 유지하고, 그 대신 2항을 삭제하여 자위와 국제평화·안전확보를 위한 ‘자위군’ 보유를 명문화하며, 집단적 자위권은 자위에 포함된 당연한 권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정치의 우경화의 맥락에서 주변국의 우

¹⁰⁰ 중의원 보고서(2005. 4.15)에서는 불인정, 조건부 인정, 전면적 인정으로 3분되어 나타났고, 참의원 보고서(2005.4.20)에서는 불인정, 제한적 인정, 인정으로 3분되어 나타났다.

려와 비판 및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헌법 개정과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9·11 총선거의 승리를 기반으로 전후결산을 위한 개혁정치 차원에서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신보수세력의 주도아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군사력의 질적 증강이라는 ‘하드 파워(hard power)’의 증강뿐 아니라 안보개혁의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정비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3. 대북전략과 북·일관계

북·일관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한국의 북방정책이 전향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일본 역시 전후처리를 위한 외교차원에서 대북한 접근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정책 및 북·일관계는 양국의 국내적 요인은 물론, 동북아 국제환경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국제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접근과 좌절, 갈등과 접촉 등을 되풀이 하면서 전개되었다. 즉, 일본의 대북 접근은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고 외무성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한계를 나타내면서 정상외교가 전개되었다.

일본의 대북정책 및 북·일관계는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한편에서는 일본인 납치의혹 문제 등에 따른 국내 여론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

미·일 공조체제와 미·일동맹체제의 조율에 따른 속도 조절 등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 즉, 일본의 대북전략 및 접근은 ① 일본인 납치문제와 ② 북핵 문제를 쟁점으로 하면서, 총리와 내각, 국회와 정치권, 언론과 여론에 주도되어 전개되고 있다.

가. 북일 정상회담 이전의 북·일관계

탈냉전기 북·일의 접근은 초기에는 국교정상화를 지향하여 전향적으로 전개되었으나, 북핵문제 및 미·북관계의 영향으로 좌절을 접하게 되고, 갈등속의 접촉 또는 접촉속의 갈등을 겪으면서 전개되어 갔다.

즉, 북·일 정상회담 이전의 북·일관계는 접촉과 갈등속에서 시별 특징을 나타내면서 전개되었다.

(1) 제1기 :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의 전향적 접근

탈냉전시대의 도래라는 글로벌 수준의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전향적인 북방정책은 북한과 일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으로 하여금 전후처리 외교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국교정상화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게 하였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일본과의 국교수립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자극하였다.

따라서,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직전 일본의 다케시다(竹下) 내각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였고, 나아가 일본의 가네마루(金丸信) 자민당 전 부총재는 1990년 9월 24~28일에 자민당

과 사회당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였다.¹⁰¹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북한을 방문한 가네마루는 관계개선을 위한 교섭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이에 북한은 전격적으로 국교정상화를 제의하였고, 그 결과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과 북한의 노동당 사이에는 동년 9월 28일 '3당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으며, 북·일간에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었다.

일본의 대북한 접근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전개되면서 정치권보다는 외무성을 통한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져 갔다. 북·일간의 국교정상화 회담은 1990년 11월 중국의 베이징에서 세 차례에 걸친 예비회담을 가진 뒤 본 회담에 들어 갔다. 본회담은 1991년 1월 30~31일 제1차 회담을 평양에서 가진 뒤 제8차까지의 회담을 가졌다. 1992년 11월 5~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8차 회담에서는 일본측이 '이은혜 조사문제'와 '핵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추후일정을 결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담을 결렬시켰다.

이후, 북·일관계는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지만, 일본과 북한은 곧 수면 아래에서 국교정상화 교섭을 위한 비공개 접촉을 베이징 등에서 가지면서 협상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갔다. 나아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설치 및 일본의 참여, 미·북간의 외교대표부 교환설치 합의 등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과 북한은 수교교섭의 재개를 위

¹⁰¹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북한방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田邊誠의 “日朝新時代の幕あげ，アジアの平和と南北統一のために，” 月刊社會黨 1990年 12月號 참조.

한 비공식·비공개적 접촉을 본격화하였다. 그와 같은 북·일간의 접촉은 일본이 대북한 국교정상화 교섭을 정당활동의 차원에서 정부차원의 대화로 정착시키면서 주로 일본 외무성의 동북아 과장과 북한 외교부의 일본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자 접촉으로 이루어졌다.

(2) 제2기: 정체상태의 북·일관계

1996년 9월에 발생한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북·일관계는 다소 제2차원인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았지만, 잠수함사건이 해결됨에 따라 북·일간의 주요 현안인 일본의 대북한 쌀지원 문제, 과거청산을 위한 배상금문제,¹⁰²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재개 등이 또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북·일간 주요 현안들의 재거론과 더불어 1997년 1월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고위층 인사 상당수가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 시기에 북한의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귀국 길의 황장엽이 한국으로 망명함에 따라 일본은 대북한 정책의 전개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황장엽의 망명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는 비교적 순탄한 국면을 맞이하였지만,¹⁰³ 일본은 여전히 대북한정책의 전개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

¹⁰² 일본은 1996년 8월 28~29일 북경에서 개최된 북·일 실무자 접촉에서 50억 달러의 청구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 50억 달러는 한국정부가 지난 1965년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5억 달러를 현재 물가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¹⁰³ 황장엽의 망명사건 직후 남북관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북한의 보복테러

특히,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안명진(安明進)이 1997년 3월 12일 일본의 「산케이신문(産經新聞)」과의 인터뷰에 응하여 1988년 10월 평양근교에 있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요코다 메구미를 목격한 상황 등을 증언함에 따라,¹⁰⁴ 일본정부는 대북한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악화, 야당 신진당(新進黨)의 대북한 정책 비판 등을 의식하여 대북한 정책의 전개에서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나아가 일본은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현안인 식량지원문제에서도 신중하게 응할 것임을 재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1997년 4월 9일의 북한선적의 화물선 ‘지성 2호’의 각성제 밀수사건과 4월 11일의 산케이신문(産經新聞)과 NHK-TV의 노동 1호¹⁰⁵의 배치 보도로 한층 신중해졌고, 또 1996년 가을에 배치작업이 중단되었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가 동해안에 재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함에 따라 더욱 신중해졌다.

요컨대, 북·일관계는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혹사건, 각성제 밀수사건,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의 동해안배치 의혹사건 등으로 인하여 일본이 대북한 정책의 전개에 신

가 우려되었다. 그러나 황장엽이 망명을 요청한지 닷새후인 2월 17일 북한의 교부 대변인은 “비겁자에 대해서는 갈테면 가라는 것이 공화국의 입장”이라고 발표하였다.

¹⁰⁴ 1997년 3월 13일자 産經新聞 에서는 요코다 메구미를 비롯한 일본인 납치·유괴사건을 1면 톱기사로 크게 보도하였다.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사건은 요코다 메구미 사건을 포함하여 7건이 있다. 한편 북한은 1997년 3월 18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産經新聞의 일본인 납치·유괴사건 보도에 대하여 “비열한 정치적 모략극”이라고 비난하였고, 아울러 이 신문을 ‘정치적 시녀’, ‘쓰레기 언론’ 등으로 극렬히 비방하였다.

¹⁰⁵ 노동 1호는 일본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 1천 3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 産經新聞과 NHK-TV는 그와 같은 미사일이 최근 이동식 발사대와 함께 3기가 재배치되었고, 게다가 곧 추가로 7기가 배치된다고 보도하였다.

중을 기함에 따라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3) 제3기: 국교정상화의 환경정비를 위한 북일의 접근

(가) 북·일간의 현안과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

항장엽 사건후 북한 공작원에 의한 일본인 납치·유괴 의혹사건, 각성제 밀수사건,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의 동해안 배치 의혹사건 등으로 북·일관계가 정체상태에 빠지게 될 때에도 일본과 북한은 1996년 3월이래 비공식 과장급 실무회담을 계속 가졌다. 그 결과 1997년 8월 21~22일 베이징에서 ‘심의관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에서는 일본인 납치사건, 식량지원 문제, 각성제 밀수의혹 사건, 북송 일본인 처 방일문제, 국교수교 본회담 조기 개최 등을 다루었다. 그 결과 북한이 부정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의혹 사건은 ‘계속 협의’ 형태로 뒤로 미루어졌지만, 대북한 식량지원 문제, 각성제 밀수의혹사건, 북송 일본인 처 방일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타결원칙이 마련되었고, 국교수교 본회담 조기 개최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북한의 ‘북송 일본인 처 방일’과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 결정

1) 북송 일본인 처 방일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합의에 따라 1997년 9월 9일 베이징

에서 개최된 북·일 적십자사 연락협의회에서는 북송 일본인 처고향방문을 실현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일본 국적의 북송 일본인 처는 1,831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 1진 15명이 1997년 11월 8일 일본에 도착하였다.

일본 언론들은 오랜 현안이었던 북송 일본인 처 전원의 일본방문 실현을 위한 첫발이 내디뎠다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1진 15명의 대부분은 북한당국에 의해 사상 및 행동을 검증받은 ‘모범생·우등생’이라고 꼬집었고, 나아가 북한이 북송 일본인 처 사업을 외교카드로 이용하거나 중단시킨다면 북·일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북·일 양국 정부는 북송 일본인 처 제1진의 방일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후속 제2진의 방일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1997년 12월에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2차 적십자사 연락협의회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1998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제2진의 방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

일본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나빠짐에 따라 대북한 식량지원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일본정부는 앞서 언급한 1997년 8월의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개최, 동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일 적십자사 연락협의회회의 북송 일본인 처 방일 합의 등을 계기로 대북한 식량지원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9월 중순부터 일본의 정부여당이 2,700만 달러의 대북 식량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동년 10월 9일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2,700만 달러의 대북한 식량지원을 결정하였다. 즉, 일본 각료회의에서는 WFP에 2,700만 달러를 기부하고, WFP가 이 자금으로 일본 재고미 6만 7,000톤을 구입하여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3) 연립 3여당 대표단의 방북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환경 정비

‘연립 3여당 대표단의 방북문제’는 1997년 3월 이후 사민당이 북한의 식량사정 및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연립여당 공동으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대두되었다. 그리고 동년 8월에 들어 오면서 베이징 심의관급 회담의 개최,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합의 등을 계기로 일본의 대북한 식량지원문제가 결정되고, 북한은 이를 경직된 북·일관계가 다소 개선되기 시작하는 조짐으로 파악하여 사민당을 통해 자민당측에 방북단 파견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자민당의 모리(森喜朗) 총무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自民·社民·사키카게 연립 방북 대표단이 구성되고, 1997년 11월 11-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처럼 1997년 중후반부터 1998년 3~4월까지의 북·일관계는 다소 진전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4) 제4기: ‘갈등속의 접촉’, ‘접촉속의 갈등’상태의 북·일관계

북·일관계는 1998년 5~6월경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 해명과 북송 일본인 처 제3진의 방일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시 냉각상태로 빠지기 시작하였다.

즉, 1998년 6월 북한 적십자사가 담화를 통하여 납치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일본정부에 통보함에 따라, 일본의 대북한 불신·반목은 한층 깊어지게 되었고, 아울러 북송 일본인 처 제3진의 방일이 중단되었다.

게다가 1998년 8월 북한의 ‘광명성 1호’ 즉, 미사일 운반체계 시험발사 사건을 계기로 하여 최악의 상태로 악화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국내에서 대북한 강경론이 확산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식량지원 중단, 직항 전세기의 운항 중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협력의 일시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북한당국 또한 일체의 대화창구를 폐쇄하였다. 즉, 북·일관계는 거의 단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극히 냉각된 북·일관계는 1999년 3월의 북한 공작선 영해 침투사건, 동년 6~8월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발사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지속되다가, 동년 9월 베를린 미·북 고위급 회담 결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다소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북·일 양국 정부는 1999년 10월 18~20일에 싱가포르에서 재차 외교 당국자간 접촉을 가졌고,¹⁰⁶ 동년 11월 2일 일본정부는

¹⁰⁶ 일본 외무성의 우메모토 가즈요시(梅本和義) 동북아 과장과 북한의 외교부 송일호 일본과장, 당 외교 당국자 등 3명이 참석하는 비공식회담을 가졌으나

북한~일본간의 전세기 운항 동결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국교회원단은 동년 12월 1~3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측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 및 예비회담 연말 개최, 북·일 적십자사 및 정부수준에서 인도적 문제 협의, 북·일간 교류와 왕래의 강화 등을 합의하였다.¹⁰⁷

이로써 북·일관계는 1992년 11월의 제8차 회담 이후 중단된 국교정상화 교섭의 재개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일 양국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다소 진통을 겪었지만, 1999년 12월 19~21일의 적십자 회담 및 21일의 국교정상화 제1차 예비회담을 베이징에서 가졌고, 이어 2000년 3월 13일에 제2차 예비회담을 베이징에서 가진 뒤, 동년 4월 4~8일 제9차 국교정상화회담을 평양에서 가졌다. 7년만에 재개된 제9차 국교정상화회담에는 다카노 고지로 북한담당 대사가 일본측 대표, 정태화 외교부순회대사가 북한측 대표로 참석하여 북·일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5월 하순에 도쿄(東京)에서 제10차 국교정상화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제10차 국교정상화회담은 북·일의 국내적 사정, 남북관계 등의 영향으로 다소 차질을 빚게 되었다. 즉, 제10차 국교정상화회담은 일본 여권의 6·25 총선 대비, 북한의 6월 12~14일의 남북정상회담 준비, 국교정상화회담을 둘러싼 북·일간의 상이한 이해관계 등으로 연기되었다.

따라서 북·일은 2000년 7월 15~17일 베이징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졌고, 이어 ‘아세안 지역포럼’(ARF) 기간중인 7월 26일에 외

별다른 진전은 나타내지 못했다.

¹⁰⁷ 동아일보, 1999년 12월 3, 4일; 朝日新聞, 1999년 12월 1, 2, 3, 4일.

상회담을 갖은 뒤, 8월 21~25일에 제10차 국교정상화 회담을 도쿄(東京)에서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북·일의 접촉과 더불어 일본국내에서는 동년 7월 3일 북·일 국교정상화 촉진활동을 위한 ‘북·일 국교촉진 국민협회’가 결성되기도 하였지만, 제10차 도쿄(東京) 국교정상화 회담 역시 북·일의 입장만 되풀이되었고, 쌍방의 접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계속한다는 합의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 및 미·북관계 진전의 영향으로 일본과 북한은 대화재개 등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면아래’ 또는 ‘수면위’에서 계속해서 추구하였다. 그 결과, 2000년 10월 말에 개최되는 제11차 국교정상화 회담을 앞두고 제3차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이 9월 12~18에 이루어 졌고, 10월 6일에는 50만톤의 식량이 북한에 지원되었다. 이는 남북관계 및 미·북관계의 진전에 자극을 받은 일본 정치권이 북·일관계의 진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북·일간의 대화 분위기의 조성과 더불어 제11차 국교정상화회담이 높은 관심 속에 10월 30~31일에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제11차 베이징회담도 기대와 달리, 차기회담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이후 북·일관계는 국교정상화 회담을 열지 못하고, 제3국에서 대화채널 유지수준의 비공식 접촉만을 하여야 했다.

게다가 2001년 11월 일본 경찰이 1999년 5월에 파산한 ‘조선동경신용조합(朝鮮東京信用組合)’의 비리 수사와 그와 관련된 조총련 중앙본부의 강제 수사를 단행하자 북·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고, 아울러 동년 12월 17일 북한 적십자회가 ‘일본인 납치의

혹 조사' 사업의 종단을 발표함에 따라 한층 악화되었다.

나. 정상회담 이후의 북·일관계

(1) 고이즈미 총리의 제1차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

냉각상태의 북·일관계는 2002년에 들어오면서 4월의 북·일 적십자회담, 7월의 브루나이 북·일 외무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다소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은 대사급 회담으로서는 북·일 양측의 쟁점 현안에 대해 타협점을 찾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수뇌회담을 전략적으로 추구하였다. 즉, 일본은 2002년 8월 18~19일의 적십자 회담 및 25~26일의 북·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 등에서 전후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시도하여 동년 9월 17일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었다.

북·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은 9월 17일 아침에 납치 일본인들의 사망문제로 인하여 경직되고 긴장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오후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에 관해 시인 및 사과를 함에 따라 주요 현안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이 일괄적으로 타결되고,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9·17 평양 공동선언은 2002년 10월 중 국교정상화회담 재개,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반성과 대북 경협 제공, 북한의 피랍 일본인 문제 사과와 재발 방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에도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데(<표 III-7> 참조), 일본 정부는 9·17 평양 공동선언을 매우 중요한 성과로서 강조하였다.

요컨대,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은 주요 현안의 일괄적 타개에 따른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평가되었다.

<표 III-7> 북·일 정상회담의 의제별 합의사항 및 과제

의제	합의사항	향후 과제
일본인 납치	○김정일 위원장의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피랍 11명 중 생존 5명, 사망 6명 생사 확인, 생존자 면담	○생존자 귀국, 사망자 사인 조사
과거청산·배상	○'95년 무라야마 담화("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 답습 ○한일 국교정상화 동일방식 보상 ○1945. 8. 15 이전 재산청구권 상호 포기 ○①무상지급 ② 저금리 장기차관 ③국제기구 통한 인도적 지원 등 3개항의 경제협력방안 합의	○자금지원 및 차관 규모 문제 ○국제협력은행 통한간접융자 및 신용공여 여부 검토
핵·미사일	○북한 2003년 이후 미사일발사 실험 계속 유예 ○한반도 핵문제 포괄적 해결을 위해 국제협약(94년 제네바합의) 준수 및 관련국 대화해결 원칙 합의	○미사일 실험유예 구체적 시한 확정 문제 ○영변 핵시설 사찰 등 핵 문제에 관한 구체적 합의 문제 ○북한 재래식무기 문제
국교정상화	○10월중 장관급 수교협상 재개	○재일 조총련계 교포 지위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2) 제1차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 이후의 북·일관계

제1차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측이 밝힌 피랍 일본인 11명 중 5명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국내에 전해지면서 일본 국민들은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언론의 북한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일본 국내의 비판적인 분위기를 완화하고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김정일-고이즈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남북 일본인 생존자 5명의 일

본 방문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말 말레이시아의 팔라렘푸르에서 개최된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회담은 납치·경협·핵문제 등 주요현안에 대해 상호간의 입장 차이만을 재확인한 채 차기회담의 일정도 결정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고, 이후,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대립에 의해 냉각상태로 빠져들었다. 특히, 일본을 일시 방문한 생존자 5명이 잔류의향의 표명과 더불어 정부 보조금을 받아 고향에 안착하고, 일본 정부가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 거주 가족(8명)의 영구귀국과 사망 및 행방불명자 8명에 대한 진상 재조사를 요구하게 되면서 북·일간에는 갈등이 한층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북한 핵문제로 북·미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고이즈미 총리와 부시대통령이 2003년 5월 23일의 크로포드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법과 관련하여 ‘강경조치(tougher measures)’를 취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정부의 압박에 비중을 둔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북·일관계는 한층 더 악화되어 갔다.

일본정부는 대북한 ‘대화와 압박’의 병용정책을 전개하면서 핵·미사일 및 납치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북한을 압박하였다. 일본정부는 2003년 8월 27~29일 베이징 제1차 6자회담에서도 대표연설을 통하여 북한 핵의 개발·보유·이전 불용, 국제적 합의 준수, 검증 가능한 방식에 의한 신속한 폐기 등을 언급하면서,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를 북·일 국교정상화 이전에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납치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시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 가와구치 외무장관은 동년 9월 20일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하여 “납치문

제는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언급하면서 UN무대에서 최초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도 동년 10월 7~8일의 인도네시아 ASEAN+3 정상회담과 10월 20~21일 방콕의 APEC 정상회담 기간중에 “납치문제는 북핵문제와 함께 해결해 간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차기 6자회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국제적으로는 납치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전략적으로 추구하면서 제2차 6자회담시의 주요의제로 상정하고자 노력하였고, 국내에서는 아베 자민당 간사장, 나카가와 경제산업 장관 등 대북 강경파가 중심이 되어 북한 압박을 위한 대북 제재 조치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04년 2월 정기국회에서는 대북 송금 중지 및 무역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 및 무역관리법 개정안」이 성립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북 압박정책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 북한은 납치문제는 2002년 9월의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므로 6자회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하였고, 연일 외교부 대변인 및 관영매체 등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기간 중 인권 유린 및 피해자·유족에 대한 사죄·보상을 주장하였으며, 조총련에 대한 테러행위의 중단 요구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요컨대, 북·일관계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에 의한 정상회담을 통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지만, 그 이후의 북일관계는 북핵문제와 납치문제로 인하여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따라서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도 제대로 전개되지 못

하였다. 그래서 북·일 양국은 양자간의 주요현안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등 다자간회담의 틀 내에서 접촉을 갖거나, 수면아래의 양자 협상을 전개하였다.

(3)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

(가) 배경

일본의 대북정책은 국내 상황,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어 왔다.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도 일본 국내 상황,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졌다.

먼저 일본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국민연금 미납 문제가 일본정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후쿠다 관방장관의 사임, 제1야당 민주당의 간 나오토 대표의 사임 등을 초래하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매우 어렵게 하였다. 게다가 납치자 가족 및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다가온 비판을 가하면서 납치피해 가족 8명의 무조건 귀국 문제 및 ‘사망’ 또는 ‘입국 사실이 없음’이라고 발표한 납치피해자 10명의 재조사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적 상황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국내의 정치적 공세를 상쇄시키면서 7월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한 국민지지율의 제고를 지향하여 전략적 승부수로서 평양방문을 단행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동북아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최근 중국이 6자회담의 성사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역할을 전개하고 있

으므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도 그와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할 수 있다. 즉, 미국이 이라크 문제 및 대통령 선거 등으로 북한문제에 깊게 간여할 여유가 적은 상태에서 북·미간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북핵문제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한계를 부딪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정치적 상황,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양방문을 전략적으로 기획한 고이즈미 총리는 대체로 2004년 4월에 접어들면서 제2차 방북을 위한 구체적인 사전 정치작업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2004년 4월 1일 야마자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 등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하여 대련(大連)에서 북한의 정태화 북·일교섭담당대사, 송일호 외무성 부국장 등과 접촉하였고, 아울러 북한의 용천역 열차폭파 사고 직후인 동년 4월 25일에 일본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10억 달러 상당의 의료품 지원을 결정함과 더불어 대북접촉을 전개하였으며, 외무성의 다나카 총괄심의관이 중심이 된 5월 4~5일 북경 정부간 협의에서는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일정부분의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방문의 결행을 정한 뒤 5월 14일 평양방문을 발표한 직후, 일본 외교상 매우 이례적으로 먼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로 방북의 취지를 설명한 뒤, 그 다음날 부시 대통령에게 방북에 관해 설명하였다.

(나) 제2차 평양회담의 합의 사항

일본 국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가 재방문하는 것에 대해 다소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① 9·17 평양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주요현안 및 핵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 문제 등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고, 나아가 ② 북·일 국교정상화의 재개를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 방북을 결단하였음을 강조하면서, 5월 22일 약 1년 8개월 만에 평양 재방문을 단행하였다.

일본과 북한은 핵심현안인 핵·미사일문제 및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입장의 차이를 보여 왔는데, 제2차 김정일-고이즈미 평양회담의 결과 <표 III-8>과 같은 합의사항이 도출되었다.

즉,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나타내 왔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의 재조사 합의를 받아내는 것과 동시에 납치피해자 가족 5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또,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양공동선언의 준수와 더불어 북한의 제4차 6자회담 참가 및 미사일 발사 동결 등의 재확인이 이루어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제2차 평양회담을 끝내고 동경에 도착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여 북한이 재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을 것을 역설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10인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조기 재조사의 실시 약속을 받아내었다고 밝혔으며, 소가 히도미씨의 가족인 남편(미군 탈주병)과 2명의 딸 문제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만나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며 설득하였지만 함께 귀국이 어려워 김정

일 국방위원장의 제의로 제3국에서 면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표 III-8> 제2차 평양회담의 핵심 합의 사항

- 09·17 평양선언의 이행 확인.
- 인도적 관점에서 북한은 납치피해자 가족 5명의 귀국 동의 및 소가히도미씨의 가족 3인의 제3국에서의 조기 면회가 가능하도록 조정.
- 북한은 사망·행방불명의 조사를 직접 착수하고, 여기에 일본도 참가.
- 인도적 입장에서 일본은 국제기관을 통해 식량 25만 톤 및 1,000만 달러 상당 의약품품을 지원.
- 일본은 평양선언 중시의 입장에서 북한이 평양선언을 준수하는 한, 경제제재를 발동하지 않음.
- 일본은 조총련계 한국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함.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쌍방이 함께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노력함.
- 미사일 발사 동결의 재확인.

(다)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에 대한 평가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방문 및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북한의 주도권에 의한 1시간 30분의 짧은 회담,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요코다 메구미의 부모를 비롯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의 가족들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5만 톤의 식량과 1,000만 달러의 의료품 지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대체로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방문 및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이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 이전인 5월 15~16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총리의 방북 지지율이 73%로 나타났고,¹⁰⁸ 아시히신문(朝日新聞)이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 직후인 23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7%가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의 계기를 마련함과 더불어 납치 피해자 5명과 함께 귀국한 고이즈미 총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40%대로 하락하였던 내각지지율은 54%까지 상승하는 기록을 나타내었다.¹⁰⁹

다.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이후 북·일관계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평양 방문 이후의 일본 국내의 상황을 보면,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북·일관계가 순탄하게만 진전될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 직후의 여론은 조기 국교정상화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민·공명·민주 3당은 5월 26일 회의를 갖고 북한 선박 등의 일본 입항을 거부할 수 있는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을 수정·합의한 뒤, 6월 3일 중의원에서 가결하였다.¹¹⁰

이는 일본 정치권이 ‘대화와 압박’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변함없이 유지할 것임을 가시적으로 표명한 것인데,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교섭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평양선언의 준수에 따른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 10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제기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고이즈미 총리의 제2차 방문후, 북·일간에는 공식 및 비공식 실무 수준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동

¹⁰⁸ 毎日新聞 2004년 5월 17일.

¹⁰⁹ 朝日新聞 2004년 5월 24일.

¹¹⁰ 朝日新聞 2004년 6월 3일(夕刊).

년 7월 8일에는 소가 히도미씨의 가족인 남편(미군 탈주병)과 2명의 딸이 싱가포르를 거쳐 도쿄(東京)로 왔고, 이어 동년 8월 11~15일의 북·일 납치문제 제1차 실무자회의 및 9월 25~26일의 베이징 북·일 납치문제 제2차 실무자회의에서는 행방불명 10인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북·일 납치문제 제2차 실무자회의에서 행방불명 10인을 비롯한 일본인 납치자 의혹문제에 대한 재조사 결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11월 9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일 납치문제 제3차 실무자회의에서 북한측으로부터 받아 온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로 밝혀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제2차 실무자회의 직후에 연내로 예정했던 대북 2차 경제지원을 보류하려 하였고,¹¹¹ 12월 8일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임을 발표함과 더불어 12월 9일에는 12만 5천톤의 식량지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¹¹² 아울러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대북 경제제재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자민당은 5단계로 구성된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¹¹³

요컨대, 북·일관계는 고이즈미 총리의 대화중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 및 가짜 유골문제 문제 등으로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 가족 연합회’는

¹¹¹ 일본 정부는 제2차 북·일정상회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25만톤의 식량과 1,000만 달러의 의료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중 식량 12만 5천톤과 700만 달러의 의료품은 10월 중순경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인 식량 12만 5천 톤과 300만 달러의 의료품 지원은 보류한다는 것이다. 東京新聞, 2004년 10월 29일.

¹¹² 日本經濟新聞, 2004년 12월 9일.

¹¹³ 讀賣新聞, 2004년 12월 9일.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해 대북 경제제재를 촉구하였다.¹¹⁴

북한 역시 2004년 11월 요코다 메구미의 가짜 유골 파동 이후 일본에 대해 비판을 계속 가해왔는데, 이와 같은 교착상태의 북·일관계는 2005년 9월 1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의 타결을 계기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5년 9월 13일 즉, 6자회담 속개 하루 전인 13일 김정일에게 보내는 ‘북일관계 정상화 교섭 재개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사사에 겐이치로(佐々江賢郎)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통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전달하였고, 제4차 6자회담의 타결에도 일본은 미국을 설득하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즉, 9·11 중의원 총선에 압승하여 정치적 기반이 한층 강해진 고이즈미 총리는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재개에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며, 따라서, 북·일관계는 수면아래 및 수면위의 교섭을 전개하며 교착상태를 탈피하고자 할 것이다.¹¹⁵

¹¹⁴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 가족 연합회’ 요코다 시게루 회장은 2005년 8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9·11 중의원 총선 공약에 대북 경제제재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도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¹¹⁵ 북한은 2004년 11월 요코다 메구미의 가짜 유골 파동 이후 일본에 대해 비판을 계속 가해왔고, 일본측과의 전화 대화를 전면 거부했으나, 제4차 6자회담의 속개 및 타결을 계기로 일본과 북한 양측 외무성간의 전화 핫라인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V

결론

1993년의 7·18총선 직후 제1당 자민당이 연립정권의 수립에 실패하고 38년만에 붕괴함에 따라, 일본 정치는 각 정파들의 합종연횡에 따른 정계개편의 과정에서 연립정권시대를 겪게 되었고, 55년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정치공간의 보수·우경화속에서 새로운 체제의 형성을 향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환기에 일본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한 ‘전후 교육’을 받은 쇼와(昭和)세대의 신보수세력은 ‘21세기 정치대국 일본’을 지향하여 국가개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신보수세력의 국가개혁 추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등장과 더불어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일본의 정치공간은 보수·우경화로 변모하면서 2005년 9·11 총선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개혁화 지향을 나타내었다. 즉,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여 신보수세력에게 새로운 국가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는 일본 국민의 정치적 요구가 ‘보수속의 개혁’ 추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 정치사회의 변화를 단순히 보수·우경화 경향으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서냉전시대의 55년체제가 ‘통상국가 일본’을 ‘경제대국 일본’으로 발전시켰다면, 탈냉전시대 1993년의 7·18 총선 이후, 정치적 지각변동 속에 형성되는 새로운 체제는 ‘경제대국 일본’을 ‘정치대국 일본’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정치·역사적 인식아래, 신보수세력은 정치대국화 국가전략을 ‘UN 중시 전략’과 ‘미일동맹 강화 전략’을 두축으로 하면서, 글로벌 차원(global level), 아시아·태평양 지역차원(regional level), 국내적 차원(domestic level)에서 전개해 오고 있다. 즉, 일본의 안보전략과 ‘하드 파워(hard power)’의 증강 및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강화, 미일

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한 미·일동맹의 전략적 공통목표의 설정과 주일미군의 재편 등도 국가전략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것이며, 일본의 대북전략 역시 한·미·일 공조체제와 미·일동맹체제의 조율에 따른 속도 조절을 하면서 총리와 내각, 국회와 정치권, 언론과 여론의 역할 분담아래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냉전기 전환기의 일본 국내정치 변화 및 대외전략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현상적 분석보다는 21세기 일본의 시대인식과 국력 및 국가전략,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미·일동맹의 역할 등에 관해 고찰하면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김현우. 일본 현대정치사. 서울: 아카넷, 2004.
- 배정호.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_____.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_____.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배정호 외 공저.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_____. 21세기 미·일·중·러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_____. 미국의 MD체제 추진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_____. 미일동맹. 서울: 세종연구소, 2001.
- 윤정석. 일본의 국가전략. 오름: 나남, 1998.
- 이기택외 지음.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서울: 일신사, 1996.
- 이춘근.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 현황.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 이태환 편.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성남: 세종연구소, 1999.
- 정진위 외 지음.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서울: 법문사, 1998.
- 廣瀬善男. 『21世紀日本の安全保障』. 東京: 明石書店, 2000.
- 橋本龍太郎. VISION OF JAPAN. 東京: KKベストセラーズ, 1993.
- _____. 政權奪回論. 東京: 講談社, 1993.
- 瀨端孝夫. 防衛計劃の大綱と日米ガイドライン. 東京: 木鐸社, 1998
- 木村昌人. 日本の安全保障とは何か. 東京: PHP研究所, 1996.
- 防衛研究會編. 防衛廳・自衛隊. 東京: かや書房, 1996.
- 防衛問題懇談會. 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あり方-21世紀へ向けての展望, 1994.
- 兵頭二十八. 日本の防衛力再考. 東京: 銀河出版, 1995.

- 福島新吾. 日本の防衛政策.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1.
- 北村兼一. いま、なぜシーレーン防衛か. 東京: 進學出版, 1988.
- 山内敏弘. 日米新ガイドラインと周邊事態法. 東京: 法律文化社, 1999.
- 西原正. 戦略研究の視覚. 東京: 人間の科學社, 1988.
- 細川護喜. 日本新黨 責任ある變革.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3.
- 船橋洋一編著. 日本戰略宣言. 東京: 講談社, 1991.
- 船橋洋一. 同盟漂流. 東京: 岩波書店, 2000.
- 小此木政夫・小島朋之. 東アジア危機の構圖.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7.
- 小川和久. 新北朝鮮と日本.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94.
-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1993.
- 松村昌廣. 米國覇權と日本の選擇. 東京: 勁草書房, 2000.
- 神谷不二. 戦後史の中の日米關係. 東京: 新潮社, 1989.
- 室山義正. 日米安保體制 上・下. 東京: 有斐閣, 1992.
- 伊藤憲一. 國家と戰略. 東京: 中央公論社, 1985.
- 五十風武士. 日米關係と東アジア.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9.
- 猪口邦子. 戦争と平和.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9.
- 猪口 孝. 現代日本國際政治と日本. 東京: 筑摩書房, 1991.
- _____. 日本政治の特異と普遍. 東京: NTT出版, 2003.
- 田原總一郎. 小泉の日本を読む. 東京: 朝日新聞社, 2005.
- 田中明彦. 新しい中世-21世紀の世界システム.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96.
- _____. 安全保障. 東京: 讀賣新聞社, 1997.
- 草野厚・梅本哲也. 現代日本外交の分析.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5.
- Gerald L. Curtis, ed., *Japan'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Coping with Change*. New York: An East Gate Book, 1993.
-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 Studies. *The Untied states and Japan: Advancing Toward a Mature Partnership*. 2000.
- Michael Jonathan. *Japan's Reluctant Realism*. New York: PALGRAVE, 2001.
- Mike M. Mochizuki, ed. *Toward A True Alliance: Restructuring U.S.-JAPAN Security Relation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7.

- Ken Booth and Russell Troad. ed. *Strategic Culture in the Asia-Pacific Reg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9.
- KENT E. CALDER. *PACIFIC DEFENSE*.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6.
- PETER J. KATZENSTEIN. *CULTURAL NORMS & NATIONAL SECURITY: Police and Military in Postwar Japan*. Ithace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 Roger Buckley. *US-Japan Diplomacy 1945-199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The Post Cold War World*. Shanghai: SIIS Publication, 2000.
- Strategy and Force Planning Faculty. *Strategy and Force Planning, Newport*. RI: Naval War College Press, 2000.
- Takashi Inoguchi. *Japan's Foreign Policy in an Era of Global Chang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3.
-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2. 논문

- 김성철. “미일동맹 강화와 TMD.” 김성철 편. 미일동맹외교. 성남: 세종연구소, 2001.
- 김태효. “일본의 소극안보정책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4호 (1997).
- 남창희. “탈냉전기 주일미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Vol. 30, No. 3 (1996).
- _____. “신 방위협력지침에 따른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Vol. 37, No. 3 (1998).
- 배정호. “국제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방위전략 -1980년대의 일본의 방위전략.” 한국정치학회보. 26집 1호 (1992).
- _____. “전후일본의 방위전략.” 戰略論叢 第 1輯 (1993).

- _____.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국가전략.” 이기택 외. 전환기의 국제 정치이론과 한반도. 서울: 일신사, 1996.
- _____.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광역화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와 한반도 급변사태.” 한국정치학회보. 32집 1호 (1998, 봄).
- _____. “신 국제질서기 일본의 동북아정책.” 정진위 외.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서울: 법문사, 1998.
- _____. “미일동맹외교.” 김성철 편. 미일동맹외교. 성남: 세종연구소, 2001.
- _____. “일본 안보정책의 보수화와 대내외적 요인.”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 최선근. “미국의 아·태 안보전략과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김성철 편. 『미일동맹외교』. 성남: 세종연구소, 2001.
- 加藤淳子. “政權形成の理論と96年日本の選挙.” Leviathan (1998 春).
- _____. “96年日本における政黨の政策と閣僚ポスト.” Leviathan (1999 春).
- 武村降夫. “私が政権と訣別した眞の理由.” 文藝春秋 (1994年 6月號).
- ピーター・メア・阪野智一. “日本の政界再編の方向.” Leviathan (1998 春).
- 山本剛土. “日朝國交正常化の焦點.” 世界 (1992年 4月號).
- 信田智人. “橋本行革の内閣機能強化策.” Leviathan (1999 春).
- 古川純. “アジアにおける平和の課題と安保條約再定義の意味.” 『法學時報』 (1996年 4月號).
- 西元徹也.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への期待.” 『デイフェンス』 秋季號 (2000).
- 西村繁樹. “日本の防衛戰略を考える.” 『新防衛論集』 第12卷 1號.
- 船橋洋一. “日米安保 再定義の全解剖.” 世界 5月號 (1996年).
- 信田智人. “橋本行革の内閣機能強化策.” Leviathan (1999 春).
- 佐藤行雄. “日本にとってアメリカの價値を考える.” 『新防衛論集』 第23卷 第1號 (1995).
- 伊奈久喜. “日米安全保障の將來展望.” 新防衛論集. 第23卷 第1號 (1995).
- Robert Wall. “U.S., Japan agree on cooperative missile defense.” *Aviation Week and Space Technology*. 23 August, 1999.

3. 기타

동북아와 한반도 (각년도). 서울: 평화연구원.

동북아 세력균형 (각년도).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東アジアの戰略環境 (各年度). 東京: 防衛廳防衛研究所.

自衛隊裝備年鑑 (各年度). 東京: 朝雲新聞社.

防衛白書 (各年度). 東京: 大藏省出版局.

外交青書 (各年度). 東京: 大藏省印刷局.

平和・安全保障研究所編. アジアの安全保障 (各年度). 東京: 朝雲新聞社.

毎日新聞

日本經濟新聞

朝日新聞

讀賣新聞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F/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 정세 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성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I)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근,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례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근,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